

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과제

2021.11.16 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유기홍, 심상정, 강민정, 강득구, 윤영덕 의원

주 관 | 연구자 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 회 | 배성인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발 제 | 강내희 지순협 대안대학 이사장 - "연구자의 권리와 자유의 쟁점"

토 론 | 박정원 교수노조 위원장 - "불평등과 싸우는 지식인"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비정규교수의 교육노동과 연구자의 권리"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 "지식생산체제의 변화와 노동권으로서의 연구자 권리"

이우창 대학원생노조 - "연구자 권리선언을 활용하기"

: 권리선언문 · 국가 · 대학원생정책

박치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 "제대로 학문할 권리 : 단지 연구자 생존용인가?"

김어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 "여성연구자의 생애주기와 연구환경"

토론회 순서 ▶▶▶

[인 새]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2
[인 새]	심상정 정의당	... 3
[인 새]	강민정 열린민주당	... 5
[인 새]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7
[인 새]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8
[사 회]	배성인 학술단체협의회	
[발 제]	강내희 지식순환협동조합	... 10
[토 론]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 24
[토 론]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29
[토 론]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 31
[토 론]	이우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 33
[토 론]	박치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 35
[토 론]	김어진·정보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39
[첨 부]	연구자권리선언	... 4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 유기홍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건강위기, 경제위기, 국제질서위기, 환경위기 등 혼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사)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원생 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심상정, 강민정, 강득구, 윤영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자, 토론자와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연구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학 전반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연구자가 일자리 부족, 신분 불안정, 연구 환경의 악화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0만 명에 가까운 석·박사가 배출되었지만, 이들은 수용하거나 지원할 기반이 없습니다. 가까스로 일자리를 가졌다고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구조,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불안감을 견뎌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세계 5위 수준이지만, 대부분이 기업 부문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2021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27조에 달하지만, 인문사회 분야는 1%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비 분배의 불균형으로 연구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연구자의 처지는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대학의 위기가 곧 학문의 위기, 연구자의 위기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지적인 퇴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연구자의 권리증진과 차별 철폐, 더 나아가 학술생태계 복원과 역량 회복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해주신 귀중한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기홍

인 사 말	
정의당 국회의원	심 상 정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윤영덕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 그리고 “연구자 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변에서 학위를 가지고도 불안정한 지위로 힘들어하는 젊은 학자들을 종종 봅니다.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학문적 열망을 가슴에 품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래 알려진 일이 아닙니다. 너무도 오래된 문제이지만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일입니다. 신진연구자들이 이 대학 저 대학에서 시간 강의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학위를 가진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시간당 강사료는 너무 박합니다. 어떤 신진연구자들은 연구 공간도 없어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자료를 펼쳐야 합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석박사과정생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들이 직면한 상황이 바로 자신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가 연구자들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문명은 오랜 역사 속 여러 지식의 결과입니다.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지식을 토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지위에 있는, 신분 불안정에 처해 있는 연구자 모두가 이 문명의 공동생산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사회 연구자 생태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우리사회가 연구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현재의 권리 차별구조를 방치하면 정말 맞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합니다.

오늘 연구자들이 스스로 ‘권리선언’에 나섰습니다. 연구자의 불안정한 연구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나섰습니다. 이 선언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연구자 기본권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어 가길 바랍니다. 이에 부응해서 누구보다 국가와 정치권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가야 합니다.

니다.

지금 연구자 사회에는 다양한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외래교수, 연구교수, 객원교수, 대우교수 등 비전임교수 직함만 32개라고 합니다. 현재의 연구자원체계에서 비정규직 연구자들을 정규직 지위로 전환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이 방식으로 문제의 뿌리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 연구자들이 서 있는 토대를 바꿔야 합니다. 이들에게 연구 일자리를 제공하여 신분 불안정 없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해야 하며,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적절한 처우도 보장해야 합니다.

우선 국가가 신진연구자들에게 중장기 연구를 보장하는 국가박사제 등을 도입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기초연구기관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제는 국가의 대대적인 연구재정 투자를 요구합니다. 국회도 이를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구사회구조에 대응하여 현행 교육체계도 획기적으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시민평생교육체계도 구축해 연구자들의 참여 공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진연구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갖는 연구자 생태계도 건강해지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쯏록 오늘 토론회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저도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인 사 말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 민 정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고등교육의 위기’, ‘대학의 위기’라는 말이 넘쳐 흐르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이러한 위기를 만들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등교육 기관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오래도록 관심 밖에 놓인 연구자의 권리를 논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강득구, 심상정, 유기홍, 윤영덕 의원님 그리고 사회, 발제, 토론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연구자는 분야를 막론하고 그동안의 개인적·사회적·기술적 성취와 실패를 면밀히 따져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예산의 규모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연구개발(R&D)을 위한 지출을 아낌없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로는 연간 20조가 넘는 연구개발비를 해마다 지출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의 지출항목이나 지출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학문분야 별로 지원금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전체 연구개발비의 1.2% 가량 만이 인문사회 분야 연구를 위해 투자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나 원천연구에 대한 관심도 매우 낮으며, 프로젝트(사업) 중심의 연구비 지원 속에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어려움은 비단 연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대학 등에서 강의를 통해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후속연구자를 양성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임교원이나 전임연구자가 아닌 이들에게 강의 기회는 연구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계유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사립대학의 시간강사 방학 중 임금 등을 지원해주던 사업도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이 밖에도 연구와 강의로 시간을 보내기도 바빠야 할 연구자들이 신진연구자나 여성연구자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실 안팎에서 겪게 되는 각종 불합리한 처우 때문에 연구자이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성과 양심이 살아 숨 쉬어야 할 기관과 주체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 놓여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연구자 권리 선언’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큰 박수와 감사 인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늘 토론회에서 나눠 주신 소중한 이야기들 귀담아 들겠습니다. 그리고 강내희 교수님의 말처럼 연구자들이 “소외로부터 소외”되기 위해 또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자유의 횃불”을 기꺼이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연구자의 권리에 대해 진단하고 분석하여 각종 차별철폐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과제 토론회>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연구자 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단체와 함께 주최해주신 유기홍, 심상정, 강민정, 윤영덕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인구절벽 현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정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현상도 심 되어 지방대의 충원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공계 계열 등 학문 쏠림현상으로 취업률이 낮은 비인기학과들은 없어지거나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위기’와 ‘학문의 위기’는 대학에서 연구하는 연구자와 교육자의 위기와도 직결됩니다.

수많은 연구자는 양극화된 노동시장과 신분제적 위계 구조 속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학술연구의 정당한 가치와 연구자들의 권리를 천명하고, 대학과 학계 내부에서 자행되는 연구자 간 차별철폐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권리 선언’ 서명 캠페인에 수백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만큼 학문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금일 토론회에서 안정적인 연구와 학문의 저변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제기되는 여러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사회를 맡아주신 배성인 한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강내희 지순협 대안대학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 각층의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지혜를 모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과제」토론회 개최를 위해 바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유기홍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토론회를 주관하신 연구자 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발제를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지순협 대안대학 강내희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교수노조 박정원 위원장님, 비정규교수노조 박중렬 위원장님,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님, 대학원생노조 이우창님, 민교협 박치현님, 비정규교수노조 김어진님 고맙습니다. 사회를 맡으신 학술단체협의회 배성인 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학진학률이 약 70%로 1위인 국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역할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학 연구자의 고용구조 양극화 문제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한 해 동안 나온 채용공고 중 교원의 경우는 약 30%가량이 비정규직 일자리라고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이른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계약임용제 교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많은 대학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계약 기간은 평균 2년 정도에 불과하고 임금 및 처우는 열악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연구를 수행하면서 강의를 하는 전국 시간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2.6%에 해당하는 강사가 불공정 사례를 겪었다고 대답했으며, 열 명중 한 명은 강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을 굴러가게 하는 모든 이들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문 활동의 터전인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살 집을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지

을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모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연구자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덕

연구자의 권리를 위한 자유의 횃불 — 아마기와 커먼즈의 회복

강 내 회

R&D 규모 세계 5위, GDP 대비 세계 2위

2019년 한국의 연구개발(R&D) 집약도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율은 4.64%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였다. 연구개발 지출 총액은 89조471억 원(764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3조 3,184억 원(3.9%)이 증가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미국 5,815억 달러, 중국 2,974억 달러, 일본 1,622억 달러, 독일 1,236억 달러(이상 2018년 기준)에 이어 5위 수준이다([연합뉴스, 2020.12.9.](#)). 한국의 연구개발비가 세계에서 지출 총액으로는 5위, 집약도로는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2020년 기준 5천130만 명으로 세계 28위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연구와 개발에 엄청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징표가 아닐 수 없다. 2020년 한국의 경제 규모가 명목 GDP 기준 1조 6,240억 달러로 11위인 러시아(1조4,030억 달러), 12위 브라질(1조3,940억 달러), 13위 호주(1조3,330억 달러) 등을 제치고 세계 10위에 오른 것([연합뉴스, 2021.03.15.](#))도 그런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언뜻 보면 자축할 일로 보인다.

연구자의 실상은?

연구개발비 규모가 세계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으니 한국의 연구 환경이며,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나 복지 등도 마찬가지로 좋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연구자들의 처지가 열악하기 그지없다. 우선 연구자를 위한 일자리가 너무 모자라다. 지난해(2020년) 국내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수는 석사 8만3,046명, 박사 1만6,139명 해서 모두 9만 9,185명이었다. 당국의 관측에 따르면 올해는 역대 최초로 10만 명 선을 넘어설 것이란다. 20년 전인 2000년에 5만3,379명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느는 셈이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 생태계가 처참하게 붕괴하여 새로 등장하는 연구자들을 수용하고 지원할 기반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대학이든 연구소든 신규 학위취득자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곳이 드물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신규 석·박사학위 취득자 중 취업한 비율은 박사는 2020년 기준으로 71.8%, 석사는 2018년 기준으로 52.4%였다([경향신문, 2021.3.14.](#)).

연구자의 신분도 불안정하다. 최근으로 올수록 연구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그것도 극도로 세분되어 나뉘고 있다. 연구자들을 옅아매는 차별구조가 고착했다는 징표다. 대학에서의 차별구조를 보면 가관이다. 지금 대학에는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분류되는 정규직 교수와 강사, 대학원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명예교수 초빙교수 특임교수 연구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기금교수 외래교수 대우교수 강의교수 교환교수 등 비전임 교수 직함이 32개나 된다고 한다([e-대학저널, 2021.6.29.](#)). 행정을 꿰고 있지 않으면 대학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알 수 없을 만큼 교수들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각종 연구소에도 책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전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문연구원 주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연구원들의 이름이 무척이나 많다. 교수와 연구원의 이름이 다양하다는 것은 직함에 따라 대우가 다르다는 말이기도 하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심하다. 대학원생들의 처지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수강과 학위논문 작성, 연구와 실

험, 자료 조사 등의 대학원생 본연의 일 이외에 대학 행정에 ‘머슴’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너무 잦다. 최근에 화학 시료 폐기 과정에서 한 대학원생이 끔찍한 화상을 입은 사고가 난 것도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웅변해준다. 상황이 이러니 젊은 연구자들이 백준희, 한경선, 서정민 님처럼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한마디로 연구자들은 이제 너무나 높은 비율로 프리케리아트가 되었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 노동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안정적인 연구직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어 비정규직 교수와 연구원들이 증폭한 결과다.¹⁾ 연구자는 통상 학력이 매우 높은데도 소득은 매우 낮다. 한 연구에 따르면, 78.3%가 박사학위 소지자인 비정규직 연구자 115명 가운데 월수입이 250만 원 이하인 사람이 77명으로 67%나 된다고 한다. 이들의 중간 소득분포는 월평균 116.6~250만 원으로 2018년 기준 한국의 일반인 월평균 소득 285만 원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귀옥, 2018: 50). 연구자들의 학력이 높다는 것은 신분상 당연하다 하겠으나, 높은 학력을 이수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보낸 연구자들이 일반인보다 더 낮은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은 대상자들의 처지가 얼마나 열악한지 웅변해준다. 오늘날 한국의 연구자들 다수는 그래서 프리케리아트가 되었다고 하겠는데, 그 말은 “구걸하다, 기원하다, 간청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precari*’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프리케리아트’를 사회학 용어로 널리 쓰이게 한 영국의 사회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에 따르면, 프리케리아트는 “사회적 보험의 보장을 받던 과거의 불안정 노동”과는 달리 “만성적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삶’ *life of unknown unknowns*’에 직면해 있다”(Standing, 2015: 6). 오늘날 한국의 연구자 대다수는 이런 불안정 노동과 불확실한 미래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그 많은 연구개발 예산은 어디로 가고 있다는 말인가? 다음 표는 분야별 연구개발비의 배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재원별 국가 총연구개발비(2008-2018)(단위 백만 PPP 달러)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기업	32,000	32,695	37,448	43,033	48,472	51,640	55,063	57,350	60,939	68,905	75,453
정부	11,156	12,600	13,949	14,538	15,469	15,580	16,786	18,205	18,328	19,508	20,217
기타	616	604	643	678	699	808	734	799	776	840	872
해외	135	95	113	131	223	207	517	578	756	1,133	1,910

(출처: 전승수 외, 2020: 13)

이 표를 보면 국가의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기업 부문이 정부 부문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기술력 향상이나 노동생산성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기업이 큰 힘을 쏟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정부 부문에서 쓰는 연구개발 예산도 기업으로 돌아가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2020년 정부 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 예산 24조2,195억 원을 부처별로 배정받은 액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7조 9,882억 원, 33.0%), 산업통상자원부(4조1,718억 원, 17.2%), 방위사업청(3조9,191억 원, 16.2%), 교육부(2조1,933억 원, 9.1%) 순이었다(한웅용·김주일, 2021: 93).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도 많은 부분이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보다는 기업 쪽으로 많이 흘러감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 사회적 자원에서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부분이 괄목할 만큼 증대했는데도,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 환경과 그곳 연구자들의 삶은 오히려 더욱 열악해진 것이 이처럼 연구 지원 체계에서 연구자들이 소외되면서 프리케리아트로 전락하고 있는 점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연구자 권리선언

- 1) 연구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이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와 관련한 통계 자료는 찾지 못했다.

연구자 일자리의 부족, 연구 환경의 악화, 연구자의 신분 불안정, 노동의 불안정과 사회적 보험으로부터의 배제, 그에 따른 삶의 불확실성 증가 등이 현실이 됨에 따라 연구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집단적 노력도 광범위하게 조직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은 노동조합의 결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연구소의 경우에는 주로 개별 연구소 중심으로, 대학의 경우에는 전국적 단위로 노동조합을 세워 권익을 지키는 운동을 전개해왔다. 대학 연구자들이 세운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으로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등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에 연구자들이 권리선언을 제창하고 나선 것은 연구자의 권익 운동이 처한 난관을 돌파하려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담겨 있다고 여겨진다. 정규직 교수이든 비정규직 교수이든, 정규직 연구원이든 비정규직 연구원이든, 교수든 대학원생이든, 나아가서 대학과 연구소라는 제도권에 속하든 독립 연구자처럼 제도권 외부에 있든 상관없이 지식을 생산하는 이는 모두 연구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는 인식, 연구자들 상호 간에도 동등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연구자들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런 인식을 담은 연구자 권리선언은 연구자들의 인권선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 갖게 된 새로운 인식이 연구자 권리선언의 주체적 동력이라면, 그것을 추동한 객관적 조건은 연구자들이 당면한 갈수록 열악한 연구 환경, 연구자들이 겪게 된 프리케리아트로서의 삶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겪는 삶의 어려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한국의 연구개발비 규모와는 너무나 대비된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연구자들의 삶의 조건이 열악해진 것은, 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훌륭하게’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노동생산성의 발전과 함께 노동자들을 상대적 과잉인구로 내모는 자본주의적 인구법칙이 지식생산 부문에서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에 해당한다. 맑스에 따르면, “자본의 축적”에 “빈곤의 축적”이 대응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이다. “자본의 형성”으로 이루어지는 ‘국부’는 “국민 대중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와 국민 대중의 궁핍화”(맑스, 2015: 985)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가 노동생산성을 높이려고 연구개발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연구자들의 노동 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연구개발비의 증가는 연구 부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산수단—기계나 건물, 원료, 보조재료 등—으로 구성되는 불변자본의 가치가 노동력으로 구성되는 가변자본의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되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고도화한다.²⁾ 하지만 문제는 이 결과 가변자본을 자신들의 임금 수입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비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증액되었는데도 연구자들의 노동 조건은 최악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가변자본을 구성하는 연구자 임금 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아졌다는 말과 같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자본주의적 생산을 발전시켜 고도성장을 이룩해왔고, 그에 따라 상대적 과잉인구를 계속 양산해왔지마는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가 구축된 뒤로, 무엇보다 IMF 위기가 닥친 1990년대 말 이후는 금융화와 함께 신자유주의가 더욱 강화된 뒤로 그 속도와 폭이 더욱 빨라지고 커졌다. 최근에 연구비의 풍년 속에서도 연구자 다수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은 과잉인구로 내몰리는 자본주의적 인구법칙이 지식생산 부문에도 그대로 관철된다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한국의 연구자들이 권리선언의 형태로 자신들의 인권선언을 제창하고 나선 것은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정당한 반응이요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자본이 신자유주의적 지배를 통해 아주 효율적인 계급투쟁을 전개한 결과 노동자계급은 계속 수세에 내몰린 셈이다. 연구 노동의 노동자인 연구자들도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연구자 권리선언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더 이상 내몰릴 길이 없는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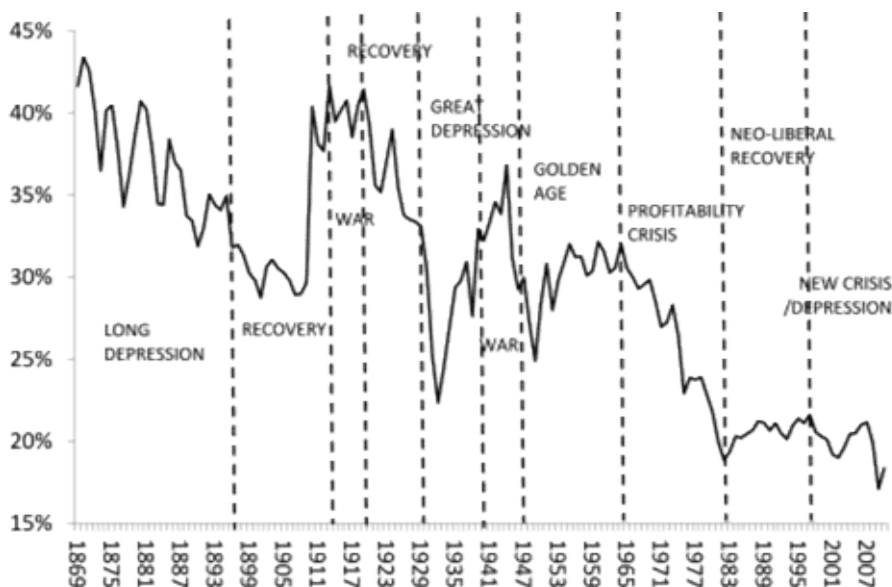
2)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나타내는 표식은 불변자본/가변자본 즉 c/v 다. 가변자본 v 에 비해 불변자본 c 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하는 것으로 여긴다.

을 찾으려는 몸부림으로 여겨진다.

공통 결핍의 시대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신자유주의는 공통 결핍의 시대를 만들어냈다. ‘공통 결핍’은 대중 일반의 인간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런 자원은 크게 보면 자연적인 자원과 사회적 자원으로 분류될 것이다. 오늘날 일반 대중에게 꼭 필요한 것은 자연 자원으로는 맑은 공기와 오염되지 않은 물, 풍족한 삼림, 일조권, 공중권 등을 꼽을 수 있겠고, 사회적 자원으로는 취업 기회, 적절한 소득, 주거 공간, (계급, 젠더와 섹슈얼리티, 세대, 지역, 인종, 학력, 직업 등과 관련한) 평등, 교육 기회, 보건 혜택, 노후보장, 자유시간과 여가, 생활상의 안전, 전쟁 대신 평화 등을 보장해주는 다양한 제도와 관행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자연적이든 사회적이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인간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은 이제 무척이나 희귀해졌다. 그 결과 일반 대중이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결핍증상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그런 증상들로는 이제는 20 대 80 사회도, 10 대 90 사회도 아닌 1 대 99 사회의 형성, 3포 5포 7포 9포 등 ‘포기 세대’의 등장,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여기는 자조적 태도의 만연, 일베 등으로 대표되는 혐오 현상의 팽배, 사회적 불평등의 타파보다는 개인적 성공에 집착하는 ‘공정 지상주의’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공통 결핍의 상태에 빠지면 사람들은 스스로 못났다고 여기고 비루해지기도 한다. 아니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아직은 노인 세대 일부가 태극기부대로 나타나는 정도이지만, 세계적으로는 네오파시즘 현상이 만연하는 상황이다.

공통 결핍 상황은 신자유주의적 지배의 강화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적 지배의 결과 나타난 현상 하나가 과두 독점이다. 과두 세력의 지배는 인류 역사에서 오랜 연원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의 지배와 함께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화와 금융화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자본의 이윤율 저하가 급속도로 이루어져 위기를 맞은 자본가계급이 그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을 공격한 계급투쟁에 속한다.



출처: Roberts, 2020.7.25.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65년 자본의 수익성은 30%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1983년에는 20% 이하로까지 떨어지는데, 이런 흐름을 저지한 것이 각국 경제의 신자유주의화였다. 신자유주의는 1947년에 결성된 몽펠랭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제출한 시장 중심적 이데올로기로서 1973년 칠레의 아옌데 사회주의 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린 피노체트 정권에 의해 국가 차원의 경제정책으로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나,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 정권을 잡은 1980년대 초 이후

에 자본주의 대국들에서도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자본 축적 전략에 해당한다(하비, 2014). 1980년대 이후 세계 수준의 이윤율이 한동안 하락하지 않은 것은 노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의 결과다.³⁾

그렇다고 이윤율이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는 수정자유주의—케인스주의—가 자본 축적의 지배적 논리로 작동하며 30%를 상회하는 이윤율로 ‘자본주의 황금시대’가 펼쳐졌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이후에는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작동했어도 이전의 이윤율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더 이상의 하락을 겨우 막았을 뿐이다. 1980년대 초반 이후의 시기를 보면, 황금시대에 비해 10%가량 더 낮은 수준의 이윤율을 얻었을 뿐이고,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이윤율은 그보다도 더 떨어져 자본주의는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게 된다. 알다시피 세계 경제는 2008년에 20세기 초반에 겪은 세계 대공황에 버금가는 대규모 공황을 겪고 계속 침체 속에 있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사태까지 맞아 최악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 자본, 특히 화폐자본이 수익성을 올린 유력한 수단의 하나가 금융화였다. 미국의 경우는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경우는 1990년대 말부터 실질임금이 전혀 상승하지 않았는데, 두 나라에서 금융화가 본격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 이후다. 금융화는 이자 낚는 자본의 운동이 강화되는 현상으로, 거기서 자본의 순환은 $M-M'$ 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가치와 잉여가치의 생산과 실현을 통한 자본의 축적 과정—이것은 $M-C-M'$ 또는 더 자세하게는 $M-C\cdots P\cdots C'-M'$ 으로 나타난다—과는 무관한 듯 보인다. 하지만 화폐가 더 많은 화폐로 직접 전환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M-M'$ 은 가치의 현실적인 생산과 실현 과정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의 운동에서 $M-M'$ 순환이 만연하는 현상인 금융화는 돈이 돈을 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지만, 그런 환상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려면 산업자본이 작용하는 실물 부문에서 생산된 가치가 이자 낚는 자본이 주도하는 금융 부문으로 대거 이전되는 현실적 과정이 필요하다. 금융화 시대에 이 가치 이전은 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보험시장 등의 자산시장을 구성하는 금보부(finance, insurance, and real estate, FIRE) 부문의 비대화로 이루어진다.⁴⁾ 한국도 최근에 급속한 속도로 금융화가 진행되었으며, 이것은 금융자산의 급격한 증대로 확인되고 있다.⁵⁾

그러나 금보부 부문 또는 자산시장의 비대화는 그에 상응하는 부채 증대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이윤율의 하락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이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격으로 나타날 때, 노동하는 대중이 공통 결핍의 나락에 빠지게 되는 핵심적 이유가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이윤율의 하락에 따른 자본 축적의 위기를 막으려고 노동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 실질임금의 장기 정체를 일으키고, 수익성이 낮은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 대신 이자 낚는 자본의 증식을 위해 금보부 부문을

3) 이윤율은 이윤/자본가치 즉, $p/(c+v)$ 로 표현된다.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는 따라서 분자보다 분모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현상이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의 증대로 불변자본 c 의 가치가 증대하는 것에 비하여 임금을 구성하는 가변자본 v 의 상대적 가치가 더 많이 하락하게 만들면—예컨대 노동조합을 해체하거나 탄압해 실질임금을 상승시키지 않고 정체시킬 수 있으면— $p/(c+v)$ 의 분수에서 분모가 증가하는 것을 일정하게 억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윤율 하락을 상쇄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윤율의 저하가 일정하게 저지된 것은 노동생산성의 증대에 비해 가변자본의 상대적 크기가 더 작아져 이윤율의 분모가 커지는 것이 어느 정도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여기서 ‘금보부’는 금융과 보험과 부동산을 줄인 말이다.

5) 한국의 금융화가 얼마나 급속하게 진행되었는지는 금융자산 규모의 증가 추이로 확인된다. 한국의 금융자산은 1970년 7.2조, 1975년 27.5조, 1980년 113.7조, 1985년 312.2조, 1990년 770.4조 원이던 것이 1995년에 1,851.8조 원으로 급증하고 이후에는 2000년 3,592.5조, 2005년 6,199.0조, 2010년 10,693.5조, 2015년 14,596.4조, 2020년 19,174.0조 원으로 더 급격하게 증가했다(통계청·한국은행, 2021: 38). 이리하여 1970~80년 시기의 GDP 대비 총금융자산의 비율은 1970년 2.6배, 1975년 2.6배, 1980년 2.9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1990년 3.9배, 1995년 4.3배, 2000년 5.7배, 2005년 6.7배, 2010년 8.5배, 2015년 9.3배, 2020년 9.9배로 엄청나게 늘어난다.

키워 금융화를 조장했고, 그 결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채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부의 축적이 부채의 축적과 병행할 수밖에 없다”(하비, 2016: 331)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지금 한국의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권리선언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연구 환경이 악화한 것도 한국 경제의 성장이 부채의 성장과 더불어 일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도, 자본의 능률적 계급투쟁 즉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직면해 수세에 몰린 결과 실질임금의 정체를 강요받고 자꾸만 모자라는 수입으로 생활수단을 조달하기 위해 부채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다른 노동자들과 다를 수가 없다. 한국에서 부채는 IMF 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지배가 강화하고 금융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금리가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것에 부추겨져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런 점은 특히 가계부채가 최근에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계부채는 1997년에 211.2조 원이던 것이 2002년 464.7조, 2007년 665.4조, 2012년 963.8조, 2017년 1,450.8조, 2020년 1,726.1조 원으로 가공할 규모가 되었다.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도 1997년(GDP 542.0조) 39.0%, 2002년(784.7조) 59.2%, 2007년(1,089.7조) 61.1%, 2012년(1,440.1조) 66.9%, 2017년(1,835.7조) 79.0%, 2020년(1,933.2조) 89.3%로 대폭 늘어났다.⁶⁾ 연구자들의 상황이 악화한 것도 이런 부채 증가와 함께한 현상이다. 연구개발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는데도 연구자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진 것은 앞서 말한 대로 국부의 증가는 인민의 궁핍화라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공식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국면에서 그 궁핍은 무엇보다 부채에 허덕이는 삶으로 구체화한다. 통계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부채에 의존하지 않으면 삶을 꾸려가기 어려운 연구자들이 분명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것은 연구 노동을 하는 연구자들이 다른 노동을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통 결핍의 상태에 놓였다는 말이기도 하다.

청동기 문명의 빛 탕감—아마기 전통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연구자들은 지금 권리선언으로써 공통 결핍의 상황을 돌파하려고 한다. 이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시의적절한 행동이다. 단, 공통 결핍의 시대가 개인들이 짊어진 부채가 급증한 시기이기도 함을 고려하면, 그런 권리선언은 갈수록 많은 연구자가 빈곤으로 내몰리는 상황의 극복, 연구자가 갈수록 많은 부채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의 극복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통 결핍의 극복은 공통 자원의 더 많은 확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의 공통 자원이 더 많아질 때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삶의 기반이 더욱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연구자 권리선언은 한국 연구자들이 자신의 ‘아마기’ 찾기에 나서는 운동으로도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논지를 펼치고 싶다. 연구자를 위한 아마기의 회복은 아래에서 보겠지만 지식인으로서 연구자를 위한 커먼즈의 구축에 속한다. 이런 운동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부채를 탕감하는 노력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맑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약 2400~1600년 시기의 근동 지역에서는 제왕들이 관례상으로 빚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빛 탕감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런 사실은 켈기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청동기 제왕들은 경제적 ‘질서와 정의’를 선포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부채 속박, 토지 몰수 등을 주기적으로 취소하고 그들의 빚을 없애주는 관례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통치 방식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런 ‘경제적 정의’ 또는 그로 인해 사람들이 얻은 자유를 가리키는 말이 ‘amagi/amargi’와 ‘nig.šiša’(수메르어), ‘misharum’(바빌로니아어), ‘andurarum’(아시리아어), ‘shudutu’(후르리어) 등이었다.⁷⁾

기원전 6세기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하는 기독교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0절에도 당시의 자유를

6) GDP 통계: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36. 가계부채 통계: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76. 1997년의 가계부채 액수(211.2조원)는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1999.6.15.)를 참고.

7)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LSE)의 하이에크 소사이어티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의 타이틀이 가소롭게도 ‘아마기’라고 한다. 하이에크 소사이어티는 보수자유주의자들의 모임인데, 그런 집단이 자신의 대표적 정기간행물 명칭을 ‘아마기’로 삼았다는 것은 그 말의 진정한 뜻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https://www.lsehayeksociety.org/amagi>.

빛 탕감과 관련시키는 표현이 나온다.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자유(*deror*)를 선포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회년이다.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https://nocr.net/korwrm/362>).

유대 문화의 회년 규정은 유대인이 겪은 바빌로니아 유수(幽囚)와 관련되어 있다. 기원전 587년에 고대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왕과 왕족 등이 신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기원전 538년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에 의해 풀려날 때까지의 기간이 ‘바빌로니아 유수’다. 레위기가 쓰인 것이 이 무렵이라는 점에서 거기에 기록된 빛 탕감은 유대인이 유수 동안 익힌 바빌로니아 전통을 반영했을 공산이 높다. 이런 점은 인용된 구절에서 언급된 ‘자유’가 히브리어로는 ‘*deror*’로 표기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허드슨에 따르면 ‘*deror*’는 아시리아어—더 정확하게는 메소포타미아 셈계 아카드어—‘*andurarum*’과 같은 어원의 말이다. 유대인들이 ‘*deror*’라는 용어로 ‘자유’를 말한 것은 바빌로니아 유수의 기억이 히브리어에 남아 있었다는 간접적 증거가 아닌가 싶다.⁸⁾ 그 단어의 어근은 흐르는 물처럼, 또는 빛으로 노예가 되었다가 가족과 합류하게끔 풀려난 노예처럼 “자유롭게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수메르어의 ‘*amagi*’도 빛으로 잡혀있던, 채권자에게 빼앗겼던 어머니가 가족에게(또는 딸이나 다른 가족이 어머니에게) 돌아옴을 의미했다. 또 다른 해석은 아마기의 선포는 경제를 그 기본 범형에 따라 공평한 균형 상태로 되돌리는 조치라는 것이다. 허드슨은 아마기/아마르기, 니그쉬사, 안두라룸, 미샤룸, 슈두투 등의 용어들은 모두 부채와 그 최악 결과들—부채 노예로의 전락과 관습 토지 소유권의 상실—로부터의 자유를 가리켰다고 해석하고 있다(Hudson, 1993: 14).

빛 탕감을 통해 회년을 준수하라는 유대의 전통은 신약성경에도 나타난다.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 하느님의 영혼이 내게 있느니라. 이는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며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들과 수인들에게 자유(*deror*)를 선포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언급된 **좋은 소식** 즉 **복음**은 무엇보다도 빛 탕감의 소식일 것이다. 포로들과 수인들의 ‘자유’가 ‘*deror*’로 표현된다는 점이 그렇게 말해준다. 알다시피 예수는 자신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것은 그의 ‘복음’이 로마의 전통과는 상반된 용납하지 못할 **변혁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수의 복음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수용될 수 없는 **급진적 주장**이었을 공산이 크다.

허드슨에 따르면, 그리스-로마 문명은 빛 탕감에 관한 한 청동기의 근동 문명과는 정반대 길을 걷는다. 아마기 전통은 청동기 문명에서는 통치자들의 ‘지혜’로 받아들여졌으나, 기원전 1200년경 기후 변동 등에 의해 청동기 제국들이 몰락하고 약 400년의 ‘암흑시대’가 펼쳐진 뒤, 그리스와 로마에서 등장한 새로운 문명에서는 그것이 나타나기만 하면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스에서도 처음에는 빛 탕감이 중요한 통치술이었다고 한다. 기원전 594년에 혁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아테네의 정권을 잡은 솔론은 “그리스 태생에 대해서는 채무 노예제를 금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고, 채권자들의 질권을 막아 해외로 팔려나간 아테네의 빛 노예들을 구출했다”(Hudson: 32). 스파르타와 코린트, 아이기나 등 다른 도시 국가들도 빛 탕감을 통해 국력을 키우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런 일을 주도한 통치자를 가리키던 그리스어 ‘티라노스(*tyrannos*)’가 ‘폭군(*tyrant*)’으로 의미 변화

8) 유대인들이 유수를 겪은 장소는 바빌로니아이고, 바빌로니아어로는 ‘자유’가 ‘*amagi*’인데 반해, 유대어에서 ‘자유’는 아시리아어 ‘*andurarum*’에서 온 ‘*deror*’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유대 사회에 퍼져 있던 빛 탕감에 대한 회구가 바빌로니아 유수 경험에서 바로 왔다고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제국이 속해 있던 같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고 추측할 수는 있을 듯싶다.

를 겪은 데서 볼 수 있듯이, 빗 탕감은 시간이 갈수록 과두 세력의 등장 속에 타기의 대상이 된다. 빗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라는 관념은 로마에서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라쿠스 형제, 카틸리나, 시저 등 빗 탕감을 꾀한 지도자들이 키케로와 같은 상원 세력에 의해 대부분 암살당하고 거세당한 것이 그 증거다. 이 과정에서 빗 탕감에 나선 쪽은 왕권을 탐하는 것으로, 그런 쪽을 제재하고 제거한 쪽은 공화국 또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것으로 포장되곤 했지만, 사실 그것은 과두제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것이 허드슨의 지적이다. 로마 이후의 세계사는 과두제의 승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예수가 등장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런 점은, 빗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여긴 로마의 전통이 이스라엘도 지배했을 것임을 말해준다. 레위기가 빗 탕감을 의무로 명시해놓았지만은 그것이 작성된 것은 예수가 등장하기 수백 년 전의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빗 탕감에 대한 요구가 부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구전과 기록 전통을 통해 아마기에 대한 기억이 보존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빗 탕감을 요구하는 운동이 종교운동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해주고 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선지자들은 레위기에 근거하여 빗 탕감을 주장했으며, 예수도 자신이 그들 선지자 전통에 속함을 분명히 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예수가 “가난한 사람”에게 전하고자 한 “좋은 소식”은 빗 탕감의 소식이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⁹⁾

기억은 사라지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이 빗 탕감을 의미한다는 점, 자유란 무엇보다도 빗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점은 철저히 잊혀버렸다. 이것은 그리스-로마 문명이 서양의 전통으로 확립되고 근대화 과정에서 세계의 서구화 또는 서양 전통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세계가 자본주의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근대사회에서는 자유의 지배적 의미는 빗 탕감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된다. 그런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한 예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유의 종’에 새겨진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un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라는 문구다. 이 문구는 앞서 인용한 레위기 61장의 한 부분이지만, 여기서 언급된 ‘자유’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deror’—‘andurarum’과 같은 어원을 지니며 빗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유는 이제 근대 국가로서 성립한 미국에서 통용되는 자유, 거두절미해서 말하자면 부르주아적인 자유로 철저한 개념 전환을 겪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이 아마기/아마르기, 안두라룸, 미샤룸 등이 지녔던 가난한 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유가 아닐 것이라는 점은 자유의 종을 만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다수가 흑인 노예를 부리고 있었다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청동기 시대의 빗 탕감 전통, 그리고 예수의 시대까지 전해오던, 빗 탕감을 진정한 자유로 여기던 전통이 자본주의화한 근대사회에서 얼마나 희석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대표적 예도 미국에서 볼 수 있다. 뉴욕의 리버티섬에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건축가 프레데리크 오귀스트 바르톨디가 제작한 이 조각상이 들고 있는 햇불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유의 여신이 햇불을 들게 된 유래, 즉 자유가 햇불로써 표현되게 된 유래는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동기의 제왕들은 제국의 안정을 위해 전면적인 빗 탕감을 할 때면 햇불을 올려 그 소식을 알렸다고 한다.¹⁰⁾ 햇불은 그 자체가 희소식이요 복음이었다고

9)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왔다”는 예수의 말은 다름 아닌 “너희의 빗을 없애주려고 왔다”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허드슨은 이런 해석에 근거하여 최근에 『그리고 그들의 빗을 사하시니 And Forgive Them Their Debts』 (Dresden: ISLET, 2018)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바 있다. 빗은 죄와 동일시되는 경우가 흔하다. 독일어와 네덜란드어에서 ‘Schuld’는 “부채”와 함께 “죄/유죄”의 의미가 있다. 허드슨에 따르면 예수가 사하려고 한 것은 관념적인 죄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빗이었다. 이렇게 보면 예수가 죽임을 당한 것은 빗을 신성시하던 로마의 법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한 결과에 해당한다.

10) “바빌로니아의 금전 관련 점토판 기록을 삭제하는 정해진 계기는 봄에 열리는 신년 축제였다. 바빌로니아의 통치자들은 자연의 다른 부분과 함께 책력에 따른 사회 갱생의 일환으로 경제적 균형을 회복시키며 부채 기록인 ‘점토판을 부숴 버리는’ 의식을 감독했다. 함무라비와 그와 비슷한 통치자들은 햇

볼 수 있다. 그것이 올라가는 날은 빛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의 지배적 전통에서 ‘복음’은 내세의 구원과 연결되면서 관념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지만,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가 재위기간에 네 차례에 걸쳐 선포한 아마기는 현실적인 희소식에 해당한다.¹¹⁾ 그러나 지금 자유의 여신이 들고 있는 횃불이 아마기의 도래를 알리는 횃불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예수가 말한 기쁜 소식, 희소식이 빛을 탕감해준다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또 얼마이겠는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자유, 다시 말해 사람들이 빛진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누릴 수 있는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임을 아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는가?

아마기와 커먼즈

사실 나는 청동기 문명에 문외한이고 기독교 전통을 말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신론자다. 그런데도 청동기 근동의 빛 탕감 관행과 복음, 회년 등에 대해 살펴본 것은 오늘날이야말로 아마기의 회복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억에서도 사라진 듯싶지만 빛 탕감의 전통은 반드시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럴 필요성은 신자유주의의 지배로 인해 엄중한 공통 결핍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최근에 와서 더욱 커졌다. 빛 탕감의 주장은 예수나 그 이전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제창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류 문명의 초창기인 청동기 시대 근동에서 ‘왕도’를 행하던 제왕들의 통치술이었다.¹²⁾ 아마기의 전통을 세우자는 것은 따라서 도덕적 주장만도 종교적 회구만도 아니다. 아마기는 청동기 제국 곳곳에서 수천 년 동안이나 실천되고 있던 현실적 관례였다. 그런 점에서 아마기의 회복을 위해 횃불을 들자는 주장을 해도 전혀 터무니없지는 않다고 여겨진다. 아마기의 횃불, 자유의 횃불을 들자는 주장은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어떤 질서를 창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이 불평등한 권력관계 아래서도—왜냐하면 고대 제국들은 제왕과 사제의 지배가 관철된 불평등 계급사회였으므로—구현되고 있던 관행을 새로운 형태로 복원하자는 것이다.

자유는 횃불을 높이 들고 할 때, 추구해야 할 자유는 경제적 자유이되 부르주아적인 경제적 자유는 아니어야 한다고 본다. 그 자유는 남에게 가난을 덮어씌우는 부당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부당하게 짊어진 가난과 부채로부터의 자유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권리도 이 후자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연구자들 다수는 공통 결핍의 상황에서 온갖 연구 자원의 결여와 빈곤, 부채 속에서 프리케리아트의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을 위한 아마기의 횃불이 타올라 각종 결핍으로부터 연구자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변혁이 필요하다.

아마기, 아마르기는 ‘백지상태’라는 뜻도 있다고 한다. 이때 백지상태란 빛과 관련한, 켜기문자로 된 이전의 기록이 다 지워져 깨끗해진 점토판의 모습이다. 수메르어로 아마기는 , 아마르기는

불, 아마도 정의의 태양신 샤마시—지혜롭고 공정한 통치자를 인도하는 신—를 상징하는 횃불을 올려 그런 선포를 알렸다. 빛보증으로 잡혀있던 사람들은 풀려나 가족과 다시 합류했다. 다른 채무자들은 쌓인 대출 담보에서 풀려나 관습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돌려 받았다”(Hudson, 1993: 20).

11) 레위기에서 언급한 회년도 희소식의 도래와 관련되어 있다. 회년은 영어로는 ‘jubilee’이고 이것은 라틴어 ‘iubilaeus’, 그리스어 ‘iabelaios’, 히브리어 ‘yobhel’과 어원을 함께 하며, 숫양의 뿔을 의미한다. 회년이 숫양 뿔과 연관된 것은 회년이 되었을 때는 숫양의 뿔로 만든 트럼펫을 불어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함무라비와 같은 청동기의 근동 제왕들이 빛 탕감으로 사람들이 자유로워졌음을 횃불로써 알린 것과 유사하다.

12) 맹자에 따르면 ‘왕도王道’는 ‘패도霸道’와 구분된다. 그는 “덕으로 인을 행하는 것이 왕이요,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것이 패”라고 하며, 하의 우, 상의 탕, 주의 문을 ‘삼왕’으로 부르며 왕도를 시행한 대표적 지도자로 간주했다. 반면에 패도의 대표주자로는 제나라의 환공(齊桓), 진나라의 문공(晉文), 진나라의 목공(秦穆), 송나라의 양공(宋襄), 초의 장왕(楚莊)이 꼽힌다. 순자는 오패를 제환공, 진문공, 송양공 이외에 오의 합려, 월의 구천으로 꼽기도 했다(中華百科全書, ‘霸道’ 참조). 20세기 초에 쑨원은 일본의 흥기를 보면서, 일본이 서구열강의 패도를 닮지 말고 (당시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의 왕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쑨원, 1997: 174).

는 ~~부채의 노예~~로 표기되었다.¹³⁾ ‘아마기’의 ‘아마’는 명사로서 “어머니”를 의미하며, ‘-기’는 “돌아가다” “회복하다”를 나타내는 말의 현재분사 형태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아마기/아마르기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최초의 어떤 완벽한 상태, 타인에게 빚진 존재가 되어 그에게 속박되지 않은 자유의 상태를 가리키는 셈이다. 단, 이때의 ‘자유’란 프롤레타리아가 새로 누리게 된 경제적 자유로서, 소외의 반대임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아마기가 선포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부자들에게 빚을 져 부채 노예가 된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아 쫓겨난 그들의 농토와 헤어진 가족과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헤어진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적 소외라면 아마기의 선포는 그들에게 그 소외가 사라지는 것이 되는 셈이다.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소외는 자본주의의 형성 및 발전과 관련해서 보면 삼중 사중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맑스에 따르면, 그것은 시초 축적 과정—종획(enclosure) 과정—에서 직접적 생산자들이 그들의 생산수단을 뺏긴 데서 시작되었다. 자신의 토지와 농기구 등 삶의 터전에서 ‘자유로워진’, 다시 말해 먹고 살 수단들을 상실해 가난해진 사람들은 삶의 기반으로부터 소외된 셈이다(소외 1). 프롤레타리아는 수중에 있는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 수 있기에 임금노동자로 전환하지만, 자본가에게 판매된 노동력이 자본가 소유의 생산수단과 합쳐져 생산요소가 되고 나면, 그와 함께 진행되는 생산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그의 노동력이 이제 자본가의 것이 된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소외 2),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생산한 상품이 자본가의 소유물이 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소외된다(소외 3).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이 더욱 발전해 산업사회가 형성된 뒤로 노동자들은 생산과정에서만 소외를 겪는 것이 아니라, 소비과정에서도 소외를 겪는 셈이다(소외 4). 노동하는 대중은 오늘날 생산과정 외부에서도, 자신들의 개인적 또는 최종적 소비에서도 생산적일 것을 요구받는다. 노동자들은 본격적 산업사회의 형성으로 “상품의 생산에서 진행된 과다의 정도가 노동자의 잉여 협력을 요구하기”(Debord, 2005: §43)에 이름에 따라 생산된 상품의 가치와 잉여가치의 실현을 위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인, 즉 생산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¹⁴⁾ 소비과정에서도 대중의 소외가 일어난다는 것은 스펙터클의 사회, 판타스마고리아의 사회가 형성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 소비를 할 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맞았고, 판촉과 광고 등에 의해 조종된 결과 자신이 원해야만 하게 된 것을 원하게 되는 추가적인 소외를 겪고 있다. 이 후자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노동하는 대중이 사상 처음으로 부채에 의존해서 소비하고 있는 현실이다. 금융화에 의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된 가운데 사람들이 임금 소득으로는 불가능한 소비를 부채에 의존해서 하게 된 것은 최근의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소외로부터의 소외가 필요하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아마기의 자유로운 상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 빚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적이다. 연구자의 권리선언도 연구자가 자신의 ‘빚진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빚집은 이때 결여와 박탈과 속박과 비루함의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연구자를 죄지은 자, 모자란 자, 잘못된 자인 것처럼 만드는 메커니즘으로도 작용한다. 독일어 ‘Schuld’에 빚과 죄의 뜻이 함께 들어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람들이 빚질 수

13) ‘amargi’는 ‘amagi’에 여격 전접어를 나타내는 ‘-ar’가 첨가된 형태라고 한다.

14)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 소비자’의 개념은 맑스가 『자본』에서 제출한 것과는 다르다. 맑스에 따르면, ‘생산적 소비’는 노동자가 “자기 노동에 의해 생산수단을 소비해 그것을 투하자본의 가치보다 큰 가치의 생산물로 전환”하는 것이고, ‘개인적 소비’는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의 대가로 지급받은 화폐를 생활수단의 구매에 지출”하는 것이다. “전자[생산적 소비]에서 그[노동자]는 자본의 동력으로 기능하며 자본가에게 속한다. 그러나 후자[개인적 소비]에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속하며 생산과정 밖에서 생활상의 기능을 행한다. 생산적 소비의 결과는 자본가의 생존이고, 개인적 소비의 결과는 노동자 자신의 생존이다”(맑스, 2015: 779). ‘생산적 소비자’는 노동자가 생산과정에 속해 있을 때 갖게 되는 주체 형태에 해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노동자는 생산과정만이 아니라 소비과정에서도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실현해주는 ‘생산적’ 행위로서의 소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소비자’가 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 나는 드보르의 스펙터클 사회론을 수용해서 노동자는 최종적/개인적 소비를 할 때도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생산적 소비자’를 사용한다.

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그들이 유죄라고 보는 경향이 지금 사회적 구조로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을 공통 결핍에 빠뜨리는 신자유주의적 지배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책임을 개인적 책임으로 전가하고,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가난과 결여를 모두 ‘내 죄’인 것으로 만든다.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어젖히며, “사회는 없다, 개인만 있을 뿐이다”라고 했을 때, 마거릿 대처와 그의 보수당 정부가 한 일 가운데는 공공 부문의 철저한 해체와 사유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케인스주의의 수정자유주의 대신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공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고 갈수록 자기 개인의 능력과 자원에만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사회적 실패도 개인의 책임과 잘못으로 여기는 데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가난해진 것, 대중이 공통 결핍의 상태에 놓인 것이 그들의 잘못이거나 책임인 것은 아니다. 사회적 부가 자본 축적의 형태로 생산됨에 따라, 대중은 그 부를 과두 세력에게 착취당하고 수탈당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유적 존재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공통 기반을 소수에게 빼앗긴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우리 것을 되찾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우리가 자연의 환경과 산물, 사회적 생산물을 공통의 삶을 위한 기반으로 누릴 권리에 속한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커먼즈에 대한 권리가 있다. 나는 연구자 권리선언은 우리가 연구자로서 누려야 할 커먼즈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커먼즈는 아마기와 상통하는 개념이다. 아마기는 ‘어머니에게 돌아감’ 또는 백지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어떤 자연 상태를 가리킨다. 커먼즈 역시 그 원형적 모습이 숲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사유재산의 지배가 작동하기 이전에 공통으로 자기 것이라 여긴 자연에 속한다. 연구자의 권리선언은 이 자연상태, 백지상태, 아마기, 커먼즈 등에 대한 권리선언인 셈이다.

서양의 역사에서 아마기 전통이 미약하나마 되살아난 것은 13세기에 마그나 카르타와 같이 카르타 포레스타(Carta Foresta) 즉 삼림 헌장이 제정된 것과 궤를 함께한다. 채택된 지 800년이 갓 넘은 이 헌장은 우리가 커먼즈라고 부르는 사회적 자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초로 법적으로 보장해준 권리선언으로서, 영국의 헨리 3세가 제정한 것이다. 그 헌장에는 1066년에 영국의 지배권력이 정복 왕 윌리엄에게 넘어간 뒤로 ‘왕의 삼림’ 즉 사냥터로 바뀐 수많은 자연 자원을 자유민이 커먼즈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 포함되어 있었다(스탠딩, 2017).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이 각종 형태의 종획과 더불어 행해지면서 삼림 헌장에서 명시된 커먼즈에 대한 대중의 권리도 계속 위축해왔다고 봐야 한다. 오늘날 마그나 카르타를 아는 사람은 많아도 카르타 포레스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구나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심화하면서 과두 자본가 세력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그나마 약소하게 남아 있던 커먼즈도 더욱 철저하게 침탈당하는 일이 만연해졌다. 세계의 금융 과두 세력이 IMF와 세계은행을 앞세워 국민 경제들에 과도한 부채를 지운 뒤 긴축 정책을 강요해 수많은 나라 대중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다. 브라질의 아마존 원시림과 같은 곳들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도 그런 과정에서 많은 나라가 부채상환의 명목으로 자국의 커먼즈를 대거 수탈당하기 때문이다.

커먼즈에는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있다. 삼림이나 강, 섬, 해변 등이 자연적 커먼즈라면, 의료와 교통 교육 주거를 위한 공공의 시설이나 제도가 사회적 커먼즈다. 이들 커먼즈는 대중의 공통 삶을 위한 소중한 기반이지만,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지배가 더욱 강화된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거 상품화와 사유화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연구자들이 권리선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커먼즈가 계속 빈약해지고, 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 아마기의 ‘백지상태’가 사실상 소멸함에 따라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데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

아마기의 햇불, 자유의 햇불을 높이 들 때다. 아마기로서의 자유는 자유의 종에 새겨진 자유와도 다르며, 자유의 여신상이 표상하는 자유와도 다르다. 그것은 자연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기도 한 커먼즈의 전면적 복원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는 자유다. 지금 연구자의 권리선언이 필요한 것도 이런 자유를 획득하려는 햇불 들기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아마기, 안두라룸(또는 유대어의 데로르), 미샤룸 등은 반복적이기는 하지만 주기적

이며, 따라서 지속적이지는 않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다. 근동 청동기 문화에서 빛 탕 감은 관례적이기는 했지만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나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한 때만 행해졌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날의 기념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한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대기독교 전통의 희년 또한 50년마다 준수하도록 한 것이니 일상적 관습은 아니었던 셈이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아마기의 자유가 그런 특별한 경우로서만 주어진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 아마기의 자유는 일상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구 행성이 인류세(the anthropocene)를 맞아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인류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수천, 수만 년은 아니더라도 수백 년의 물질대사 변화가 일어나야 했지만, 지금은 자본의 끝없는 축적으로 인해 상품 생산에 따른 물질대사의 규모가 가공할 정도로 커졌으며, 그 결과 인류생존의 시계가 마지막 분초를 가리키는 형국이다.¹⁵⁾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기 상태를 수십 년에 한 번 정도 회복시키는 것으로는 인류의 생존이 보장될 수 없다. 아마기 상태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 나는 그렇게 하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를 연구자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의 제도화에서 찾고 싶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으며, 양쪽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안다. 내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것은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지배하에서 축적된 사회적 부에 대한 인류 전체의 접근권을 보장해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자산조사와 노동 강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액수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제도화하면 연구자들도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평민들이 왕의 삼림에서 필요한 생활 자원을 채취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 삼림 헌장의 정신과도 상응한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갖는 지분, 사회적 배당금(social dividend)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본소득으로 연구자들이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수령 액수가 충분해야 하겠지만, 얼마만큼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는 집단적 노력과 투쟁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나는 기본소득을 지지하지마는 그것으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문제들, 특히 공통 결핍의 상황을 자아내는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도 큰 과제이겠지만, 설령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법칙을 해체하거나, 노동하는 대중의 상대적 과잉인구로의 전략을 막아내진 못할 것이다. 이런 점은 역사적 커먼즈, 아마기를 생각해보더라도 알 수 있다. 중세의 영국에서 대중에게 커먼즈 접근권이 주어졌을 때 그에 의해 영국 사회가 ‘백지상태’로서의 자유를 구현했다고 볼 수는 없다. 노르망디에서 온 정복왕이 영국의 커먼즈를 대거 왕의 삼림 즉 사냥터로 사용하기 이전에 누리고 있던 커먼즈에 대한 접근권을 삼림 헌장의 제정으로 다시 누리게 된 뒤에도, 영국의 프롤레타리아는 여전히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 살아야만 했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등 고대 제왕들이 아무리 아마기의 ‘왕도’를 관례로 실천했기로서니 그들 제왕과 상층부 사제가 지배계급으로 군림하던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자유의 횃불을 들자는 제안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새로운 자유의 횃불을 들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커먼즈, 아마기의 구축을 위한 횃불을 올리자는 것은 고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지만

15) 『자본』 1권의 첫 번째 문장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방대한 상품 더미’로 나타나며, 개개의 상품의 부의 기본형태다”(맑스, 2015: 43)에서 ‘방대한’을 가리키는 독일어는 ‘ungeheuer’로서 “섬뜩하게 크다”는 의미가 있다. ‘ungeheuer’의 ‘geheuer’는 “유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이므로 ‘unheheuer’는 “유령 만난 듯 섬뜩하다”는 뜻이 된다. 이런 용어 사용을 보면, 자신의 주저를 펴낸 1867년에 맑스가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규모가 얼마나 가공스럽게 크다고 느꼈을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 초판 이후 150년이 더 지난 오늘날 ‘상품 더미’의 규모를 본다면, 맑스가 어떤 표현을 쓸는지 궁금해진다. “사회적 부”가 상품의 형태로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계속된 결과, 상품의 규모는 이제 지구 행성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졌다. 그 객관적 증거가 인류세의 등장이다. 인류세를 등장시킨 것이 상품 생산에 따른 거대한 물질대사의 작용임을 생각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생존은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기억에서도 거의 사라진 전통을 살려내기는 하되, 과거에 있었던 사회 회복의 장치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자는 제안이다.

새로운 자유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극복하려는 변혁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속하고 발전하는 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고도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상대적 비중에서 전자가 계속 커진다는 말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이윤율의 저하와 함께 일어난다. 왜냐하면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합계로 이루어지는 자본가치의 비중이 불변자본의 끝없는 증대에 따라 이윤 또는 잉여가치의 비중보다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이윤율이 저하하면 가변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불변자본이 커지는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작게 만드는 이윤율 저하의 상쇄 효과를 만들어내는 각종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계급의 일부분—때로는 너무 큰 규모가 될 수도 있는—을 상대적 과잉인구로 만드는 일이다. 맑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이런 가치법칙은 “움직일 수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작용해 관철”된다는 점에서 “자연법칙”과 같다(맑스, 2015: 5).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자유, 즉 국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중이 내몰리게 되는 궁핍함과 빚짐으로부터의 자유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극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자유의 횃불을 들자는 것은 그런 점에서 금융화 등을 통해 연구자와 노동하는 다른 대중을 공통 궁핍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적 지배를 혁파하자는 것이면서, 더 나아가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을 해체하여 새로운 사회적 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을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전환하는 일은 물론 당장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연구자의 권리선언 운동이 연구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면서 오늘날 적합한 커먼즈와 아마기를 회복하는 데 공헌한다면, 그런 변화를 앞당기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2021.11.12.)

인용문헌

- 경향신문(2021.3.14). 「10만명의 석·박사들 어디로 가오리까」
- 김귀옥(2018). 「학문절벽의 시대, 비정규직 연구자의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정신문화』, 제41권 3호
- 맑스, 칼(2015). 『자본론 I[하]』,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 스탠딩, 가이(2017). 「당신이 마그나 카르타만큼 중요한 삼림 현장에 대하여 결코 들어보지 못한 이유」, 민서 역. <http://commonstrans.net/?p=974>
- 쑨원(1997). 「대아시아주의」,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 전승수 외(2020). 『2020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합뉴스(2020.12.09.). 「한국, 지난해 R&D에 약 89조 투자…“OECD 국가 중 세계 5위”」
- 통계청·한국은행(2021).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90760
- 하비, 데이비드(2014).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최병두 역, 한울
- _____(2016).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2』, 강신준 역, 창비
- 한국은행(1999.6.15.). 「1999년 1/4분기 가계신용 동향」.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5545&menuNo=2&pageIndex=1047>
- 한웅용·김주일(2021).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e-대학저널(2021.6.29). 「겸임·객원·대우·초빙…“교수가 너무 많다”」
- Debord, Guy (2005). *The Society of the Spectacle*. Tr. Donald Nicholson-Smith. New York: Zone Books
- Hudson, Michael (1993). *The Lost Tradition of Biblical Debt Cancellations*. New York, NY: Henry George School of Social Science. <https://michael-hudson.com/wp-content/uploads/2010/03/HudsonLostTradition.pdf>

_____ (2018). *...And Forgive Them Their Debts: Lending, Foreclosure and Redemption From Bronze Age Finance to the Jubilee Year*. Dresden: ISLET

Standing, Guy (2015). "The Precariat and Class Struggle." *RCCS Annual Review*, 7

불평등과 싸우는 지식인

박 정 원

1. 불편한 진실

먼저 현역 교수로 있을 때, 대학 내의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극 싸우지 못했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 보직을 계속 사양하다가 맡고난 후 파악해 보니 토론자가 처음 교수협의회를 만들어 대학민주화투쟁에 시동을 걸었던 바로 그 대학에, 사학민주화운동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소위 ‘민주대학’으로 불리던 그 대학의 일부 학과에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있었다. 그들은 저임금에다 복지혜택도 없이 2년마다 재계약을 위해 동료교수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물론 부교수 승진제도도 없었고, 연구년 등 다른 권리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직교수들 및 교수협의회 임원들과 협의를 했다. 대상자 전원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소속 학과의 공식신청을 받아 정년트랙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 개의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의 교수들이 모두 비정년트랙교수의 정년트랙화에 반대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지원했다’, ‘비정년트랙이라고 해서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고 뽑았다’, ‘정년트랙이라면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다’ 등 반대 이유를 말했는데 기가 막혔다. 저들이 과연 나와 같이 교육민주화를 외치며 싸웠던 사람들인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 어쨌든 정년트랙 교수들의 저항으로 비정년트랙을 완전히 없애는 데 실패하고, 처우만 대폭 개선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했다.

그 대학에 지금은 더 많은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재직하고 있으며, 온갖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근무조건도 과거로 회귀했으며, 교수협의회 가입도 거부당했고 총장선거 등 자치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2. 학문을 외면하는 나라

한국은 2020년 현재 25-34세 연령의 대학졸업자 비율이 70%로 전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고학력 국가이다. 그다음 국가들은 캐나다(64%), 일본·러시아¹⁶⁾(62%), 아일랜드·룩셈부르크(58%), 영국·리투아니아(56%), 호주(55%), 스위스(53%) 등이다. 주요국들을 보면, 미국·네덜란드(52%), 프랑스(49%), 덴마크(47%), 핀란드(45%) 등이고, 소위 선진국 중에서는 이탈리아(29%)와 독일(35%)이 아주 낮다. OECD 37개국과 EU22개국 평균 비율은 각각 45%이다.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16) 러시아는 OECD회원국이 아님.

대학진학률 84%의 대한민국! 일찍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향학열이 높은 사회가 있었던가? 세계에서 가장 유식한(?) 국민이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청년층 대학졸업자의 비율이 최고인 한국은 25-64세 인구¹⁷⁾ 가운데 최종학위로서의 석사와 박사학위 소지율이 OECD 최하위에 가깝다.

<표 1>에 주요국의 2020년 기준 25-64세 인구 중 학위 소지자 비율이 나와 있다.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는 석박사학위 소지자가 30%에 달한다. 역시 고소득국가인 스위스가 23%, 그리고 슬로베니아 21%, 핀란드 18% 등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웬만한 유럽국들은 15%를 넘는다. 비회원국인 러시아가 29%로 룩셈부르크와 맞먹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OECD회원국 가운데 이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2%인 멕시코와 터키 밖에 없다.

<표 1> 주요국 25-64세 인구 중 학위 소지자 비율(% , 2020)

국가/학위	전문학사 (2-3년제 졸업)	학사 (또는 동급)	석사 (또는 동급)	박사 (또는 동급)
한국	14	32	4	
호주	12	27	9	2
벨기에	1	23	18	1
캐나다	26	23	11	
덴마크	5	20	14	1
핀란드	10	20	17	1
프랑스	15	11	13	1
독일	1	17	12	2
아일랜드	7	29	13	1
이탈리아	0	5	15	1
룩셈부르크	5	16	28	2
멕시코	1	17	2	0
네덜란드	2	25	15	1
스웨덴	10	18	15	2
스위스	-	23	20	3
슬로베니아	7	8	16	5
영국	10	25	13	2
미국	11	25	12	2
터키	6	13	2	0
OECD	7	18	14	1
EU22개국	5	15	16	1
러시아	25	3	28	1

자료: OECD(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대학 졸업 후 더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 나라, 한국! 한국은 학문이 망해버린 국가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서울대 등 인기 대학원들도 미달사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¹⁸⁾. 왜 한국인들은 학부 교육에만 열중(?)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적 지식을 더 쌓거나 연구자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일까? 대학원을 가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자.

첫째, 대학 졸업장으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에 충분하니까 굳이 대학원에 가지 않는

17) 1976년~2015년까지 고교졸업자들이 이 연령대에 해당한다.

18) 서울대 공대 대학원의 신입생 미달은 병역특례 폐지가 그 원인이라고 한다.

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다. 대학원 교육시장은 대졸자 노동시장과는 다르게 움직인다. 즉, 취직이 안 되어 대학원에 들어온 사람이 대학원 진학자는 아니다. 아무리 취직이 잘되어도, 대학원에 진학할 사람은 진학한다. 이런 주장은 최근의 대졸자의 낮은 취업률과 대학원 진학 기피 현상을 설명하지도 못한다.

둘째, 대학진학의 목적이 학벌사회 편입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상위권대학 졸업으로 일단 학벌사회 편입에 성공했고, 더 이상의 학력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 추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철저한 학벌사회인 한국에서 대학진학으로 진학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고, 외로운 연구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대학원 진학은 사회관계 형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대학원 진학을 할 이유가 없다.

셋째, 대학원 진학 후의 진로가 험난하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것이다. 현실에서 연구자의 길은 험난하다. 여러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대학원 입학부터 등록금과 생활비 등 비용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지식 노동자로서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몇 년을 노력해야 할지도 알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이 대학원 진학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그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현황

연구자는 지식과 학문을 생산·유통·소비하는 지식 노동자이다. 연구자는 대학교수와 강사 및 대학원생 그리고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는 연구원들과 홀로 연구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한다. 연구자의 자격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들은 대체로 근대학문의 연구방법론을 습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위 취득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석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다 연구자인 것은 아니지만, 석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연구자가 많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생산물을 대량 소비하여 자신의 생산과정에 투입하는 점이 다른 노동자들과 구분되는 점이다. 그래서 연구노동자들 간에 상호의존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약탈적 연구자들도 있어서 무단 복제 등이 성행하기도 한다.

인류문명의 발전에 연구자가 기여한 바는 크다. 연구자들은 생산기술의 향상과 사회발전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 등 연구기관들이 신자유주의적 운영원칙에 따라 임금 설정을 생산성에 맞추고 있는데, 윌리엄 보몰이 『공연예술의 경제적 딜레마』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교육/연구분야는 일반산업처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화상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억지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해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낮추면서 연구와 교육활동의 평가절하를 가져왔다. 오히려 등록금 인하요구만 커졌다.

연구자들은 지식을 확장/수정하고 창조하며 보급하는 복합노동을 수행하고 있어 지식생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주체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소속돼 있는 지식생산조직은 이윤추구 논리 또는 비용극소화 논리에 따라 연구자들을 하나의 비용발생 요인으로만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연구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교육·연구분야 및 지식생산분야는 경쟁부문에 인재를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자의 인적자본 형성과정은 대학입학 후 석박사과정까지 최소 10-15년이 소요되지만 노동력가치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 개인의 삶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학문붕괴 위기이기도 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남 C대학과 강원도 H대학 총장의 연봉은 3억4천만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총장에 대해 연간 2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고, 총장 보수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부 대학은 아예 공개를 거부했다. 이들 고액연봉 총장들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비정년트랙교수들에게 3천-5천만원의 연봉을 주고 있다. 비정년트랙교수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데,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 2021년 2차례에 걸쳐 전국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정년과 비정년 전임교원의 구성비가 약 67.6% 대 32.4%에 달했다. 전문대학은 전체 교원의 38.3%, 일반대학은 30.8%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었다.

15개 대학 중 9개 대학에서 승진제도가 없어 만년 조교수에 머물렀고, 5개 대학은 부교수까지 승진이 가능했으며 정교수로 승진할 수 있는 대학은 1개에 불과했다.

비정년트랙 교원들의 임금수준은 조사대상 학교의 72.8%에서 정년트랙 교수의 50%이하에 머물렀고, 전문대의 경우에는 전체 대학이 정년트랙의 40%이하였다.

비정년트랙 교원들에 대해 육아휴직과 병가휴직이 없는 학교가 각각 46.7%와 40.0%에 이르렀고, 33.3%의 대학들은 교내 연구비 지급에서 이들을 배제했으며, 특히 조사대상 대학 모두에서 연구년이 주어지지 않았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비정년트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에 대해 조직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이다. 국가 학문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상국면을 수습해야 한다.

4. 연구자의 권리 보장 방안들

첫째, 고등교육이 완전 무상화되어야 한다.

연구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대학원을 다녀야 하고, 대학원 재학 중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대학원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국가가 지급하여 연구자로서의 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완전무상화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자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구자들이 지식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해야 하며, 이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호봉제정년트랙 전임교원-연봉제정년트랙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비정규직 교원으로 되어 있는 교수계층화 질서가 해체되어야 한다.

연구자 단일호봉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호봉제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이 앞장서서 교수/연구자의 서열화를 해체해야 한다.

지금까지 호봉제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은 비정년트랙교원 및 비정규직 교원들의 희생 위에서 교육연구활동을 수행해 왔다. 이제 수혜를 입은 연구자들이 앞장서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다섯째, 연구자들이 단결해서 대응해야 한다.

2019년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면서 사학법인연합회와 교육부의 책동에 말려 기업별노조를 허용한 것은 큰 실수였다. 개별 대학노조의 난립으로 교수노조의 교섭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 상태로는 차별과 불평등해소를 위해 큰힘을 발휘할 수 없다. 산별조직으로의 회귀는 사실상 어렵지만, 연대와 단결은 가능하다. 강력한 단결로 연구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돈키호테처럼 용감하게 불평등과 싸우는 지식인이 필요하다. 더 늦으면 한국의 학문체계는 완전 붕괴하고 말 것이다!

비정규교수의 교육노동과 연구자의 권리

박 중 렬

비정규교수는 일반적으로 대학 강사를 가리킨다. 대학 강사는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의 연구 과정을 거쳐 비정규직의 신분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한다. 이들의 강의는 그들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학생들에게 교육이라는 형태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학문 연구 활동의 외연에 해당한다. 강사가 고등교육법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교원이고, ‘교육과 지도, 학문연구’가 그 임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요컨대 강사는 기본적으로 교육연구노동자이다.

연구자로서 비정규직인 강사가 제대로 연구하려면 제대로 된 연구 환경이 필요하다. 이점은 정규직인 전임교원도 마찬가지다. 뒤집어 말하자면 정책, 제도, 시설, 재정과 같은 연구 인프라는 연구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점을 간과하면 학문 발전이 지체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대학의 교육이나 학문 연구의 질은 결국 연구자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사가 연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무엇보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치 않다. 대학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대다수의 강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인문사회계열(예체능 포함) 분야를 홀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교나 폐과, 학과통폐합, 취업 중심의 실용 교과목 확대 등으로 말미암아 기초 학문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 문제는 대학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전임교원들도 구조조정 대상인데 비정규직인 대학 강사들을 배려할 리 만무하다. 결국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학문생태계의 측면에서 인문사회계열의 연구자가 사라진다면 대학과 고등교육도 붕괴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은 무척 오래된 화두였다.

두 번째로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 임용과 재임용절차를 포함한 3년의 임용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2021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대학의 재임용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242개 대학의 재임용 심사 대상자 57,375명 중 14.7%인 8,443명이 재임용 심사 제외자였다. 이 가운데 교과목 개편, 신임교원 채용 면직, 강의평가 미달 등의 사유로 심사에서 탈락한 인원이 16.5%인 반면, 스스로 재임용을 포기한 인원이 83.5%인 7,057명이었다. 재임용 신청을 포기한 사유를 알기 어려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치이다. 혹 예전 시간강사 제도하에서처럼 학과에서 재임용 신청을 포기하도록 종용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이 강사법을 자의적으로 악용하지는 않는지, 재임용 절차를 규정한 강사법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는지 우려스럽다.

강사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연구자로서의 활동이 끊기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2019년 강사법 개정 당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요구하여 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있는 강사라면 비록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였더라도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도나 재정 지원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연구 활동만으로도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구축이다. 생활 임금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한다면,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길 것이고, 이때야 비로소 장기적인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학문은 살아난다.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은 특히 더 그러하다. 연구자로서의 대학 강사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이 외에도 현재의 연구 여건하에서 연구자로서의 대학 강사의 권리를 확대하고, 연구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등재(후보) 학술지 게재 논문의 연구비 전면 지급

현재는 연구계획서 제출, 심사 및 선정, 연구비 지급이라는 절차로 진행. 일단 인문사회계만이라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등재(후보)지는 이미 연구재단의 심사를 거쳐 공인된 전문학술지이므로 여기에 게재된 논문은 그 수준을 인정받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음. 연구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연구 활동이 촉진되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구조임.

2) 이공계 대학 강사의 실험실 사용 권리 보장

이공계 대학 강사의 경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험실을 사용할 수 없음. 연구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것임. 인문사회계 대학 강사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별다른 제약이 없듯이 이공계 연구자가 필요할 때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3) 예술계 대학 강사의 공연·전시·발표 활동 지원

인문사회계 강사가 논문을 게재하면 연구비를 지원하는 위 제안과 동일한 취지임. 예능계 대학 강사는 이미 예술 활동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음.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임.

4) 교육연구비와 학생지도비 지급

전술하였듯이 대학 강사의 임무는 ‘교육 및 지도, 학문연구’임. 시간제 근로자로서 강의만 하는 것 같지만 그 강의 활동에 학생 지도와 학문연구가 부가되어 있음. 국립대의 경우 전임 교원과 직원, 조교에게 교육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음. 직원과 조교에게조차 지급하는 수당을 ‘교원’인 강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지식생산체제의 변화와 노동권으로서의 연구자 권리

김 직 수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대학은 물론 이른바 ‘재야’ 연구기관에서도 지식생산 방식은 이미 개별화되어 있다. 과거와 같은 집합적 지식생산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집단지성을 기대하기도 더 이상 어려워 보인다. 소셜 미디어는 지식생산과 유통의 장으로 보기에는 지뢰밭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 팩트체크에 열심인 시민들도 나타났지만, 가짜뉴스가 지배하는 탈진실 사회의 흐름을 역전시키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학회 및 학술운동단체(연구소 등)보다 이른바 학진 체제의 일부인 ‘연구사업단’이 더 중요하게 된 지 오래다. 성향이나 뜻이 맞는 연구자들의 세미나탐조차도 존재 의의를 상실하며 사라졌다. 지식생산에서 구상과 실행의 분리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예전처럼 대담하게 이론가를 자처하는 이들도 찾아볼 수 없다. 기성 연구자들은 한편으로 ‘구상’을 담당하는 영미권 대학의 이론들을 수입하고, 다른 한편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는 단순 실행 담당 연구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자 사회 또는 연구자 공동체라는 것이 만일 존재한다면, 연구자의 권리는 우선 다른 연구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 의해 성립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기책임윤리 또는 자기관리에의 강조 측면에서 보면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되어 있는 듯 보인다. 더욱이 필자 자신을 포함하여 특히 사회과학 연구자들일수록 스스로를 그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들로부터 예외적인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아니면 진실로 거짓말도 백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믿거나(괴벨스?), 힘의 논리를 이미 내면화(86세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연구자 사회 내에서 ‘가진 자’들은 비윤리적 행위를 범하였을 때에도 끝까지 부정하고 버티면 곧 그 사실조차 잊혀지고, 없었던 일이 되어 원위치로 돌아오지만, ‘갇지 못한 자’들은 무언가 저질렀을 때 그 맥락은 고려되지 않고 철저히 개인의 비위로 내몰리며 쫓겨나고 사라진다. 이는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에 민감한 개인들 및 소집단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연구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는 ‘치부’일 뿐이다. 은폐와 무마라는 ‘하얀 거탑’에나 나올 법할 일들은 우리는 가끔씩 접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배경 중 하나는 대학과 연구자 사회가 의외로(?) 전근대적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제외하고 아직 탈주술화(!)가 안 된 몇몇 분야 중 한 곳이 아닐까 싶다. 자신만은 예외라 여기며 변하지 않는 기득권층도 문제지만,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며 노동자가 되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연구노동자, 지식노동자들도 문제다. 이러하다 보니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받는 ‘사건’이 일어나면 합리적 절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쪽을 내쫓겨

나 물어버려야 끝나는, 죽고 사는 싸움이 되어버린다. 가해자는 반성하고 교육받아 변화하고, 피해자는 보상과 치유를 받은 뒤, 양자 모두 연구활동을 계속하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자 권리선언 해제에서 지적하고 있는 ‘학문 공동체의 위계 구조하 학회 간사들의 노동이 착취되는 현실’도 ‘인건비의 구조적 보장 부재’에 따른 문제 이전에 연구자들 자신의 노동자 의식 및 그에 따른 노동권 인식 부재에 의한 문제다. 기성 연구자들부터 걸으려는 어떨지 몰라도 실제로는 학회 간사 일 따위는 잡일 취급하니 후속세대 연구자들도 그런 태도를 배우며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모 학회에서 간사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뒤, 사건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나온 성명에서 간사 노동에 대한 맥락적인 설명은 일도 찾아보지 못한 적이 있다.

예전에 나의 스승들 가운데 한 분은 국책연구기관에 들어가 일하는 연구자들을 배신자 취급하곤 했다. 정부 성향에 따라 연구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론적 한계를 지적했을 뿐이리라. 그런데 막상 대학원의 동료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책연구기관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다. 잠깐이었지만 정신분열이 올 것 같았다. 노동조합 부설 연구기관에선 동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하기 시작한 뒤 2년쯤 지나서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 인덕이 부족하여 주변에 솔직한 사람이 없었던 탓일 것이다. 어떤 공적인 토론 자리에서 선배 연구자로부터 당신도 커리어 잘 쌓아서 좋은 곳으로 가라는 소리를 들었다. 오기가 나서 끝까지 연구소를 지킬 거라고 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부설 연구소는 쉽지 않은 곳이다. 거대 산별 노조인 만큼 여러 분야에 정통할 것을 요구받으면서도 각각의 분야에 대해 전문성 또한 요구 받는다. 이는 물론 연구자로서 성장의 계기가 되는 환경이기도 하다.

모든 연구자들에게 노동자 정체성과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연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반적으로 어떠한지 잘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연구자들 내부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족 배경 등에서 갭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연구자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고 본다. 연구자 공동체 내부의 경제적 격차는 연구자의 ‘생산성’에 따라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연구라는 일이 오랜 동안 전혀 성과가 안 나오다가 정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꾸준히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더라도 사회적으로는 별 의미 없는 연구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연구자들의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애매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솔직한 생각은 연구자들의 이른바 ‘생산성’과 무관하게 모든 연구자들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은 의미 없지 않은가 싶다.

202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인 일본계 미국인이 수상 소감을 물으며 왜 미국인으로 귀화했느냐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 답했던 내용이 떠오른다. 일본에서는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무릇 연구활동이란 본인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으며 결국 성과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다. 물론 그가 중심부 국가에서 ‘황금 시대’를 보낸 연구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말이다.

“연구자 권리선언” 을 활용하기: 권리선언문, 국가, 대학원생 정책

이 우 창

먼저 「연구자 권리선언」의 집필 및 완성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쏟으신 여러 선생님께 짧게나마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여전히 고투하고 있는 갖가지 열악하고 비상식적인 조건,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및 연구환경이 직면한 위기의 거대함을 고려하면, 「연구자 권리선언」의 중핵에 있는 실천적인 의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의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충분히 공유되었다는 전제하에, 저는 한편으로는 대학원생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활동해온 사람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와 사상의 운동을 탐구하는 연구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지점은 권리선언문이라는 독특한 장르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말과 글의 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을 드러내곤 합니다. 하나는 마치 신비한 말씀의 힘을 믿는 주술사들처럼 발화된 언어 자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말은 그저 무의미한 빈껍데기이자 아무런 실질이 없는 장식이라는 냉소적인 관점입니다. 이는 권리선언문이라는 장르를 대할 때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리선언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세상이 뒤바뀔 것처럼 믿고, 반대편에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서류 따위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웃고는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태도는 언어가 세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순박함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권리선언문과 같은 문건의 경우, 물론 그 자체로 특정한 규범적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비)제도적 장치들과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상에 갓 모습을 드러낸 「연구자 권리선언」은 당연히도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건의 힘은,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는, 이것을 어떤 종류의 장치와 연결하고 접속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연구자 권리선언」을 가장 효율적으로 또 우리의 목표에 맞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문건의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대목, 다름 아닌 9조 “국가의 책무” 항목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미 초고에 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연구자의 권리를 선언하는 문건에서 연구자가 아닌 “국가”를 주어로 삼는 문형이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권리선언문이라는 장르의 문법에서 볼 때 매우 이질적인 지점입니다. 하지만, 긍정과 부정을 떠나, 저는 이것이 그 자체로 한국 학술연구의 근본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에서 제도로서의 근대적 학술연구가 성립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 국가기구의 역할이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고등교육연구기관은 미국의 부유하고 선도적인 사립대학처럼 매우 높은 비용의 등록금을 거두어들이거나, 영국의 유구한 칼리지처럼 스스로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산을 보유한 서울대는 봉건적인 지배구조로 인해 스스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만큼의 고도화된 행정장악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지원 없이도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민간지원기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한국의 시민사회는 전문가를 찾지만 돈을 낼 의향은 없습니다. 결론은 자명합니다. 한국의 학술연구는 국가의 재정지원 및 그에 수반하는 행정조치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연구자 권리선언」 9조는 그 존재 자체로 이것이 좋고 싫고를 떠나 우리가 서 있는 조건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위에서 저는 우리가 국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한국 학술연구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의원실과 각종 기구, 선거캠프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게시는 분들의 수는 적지 않습니다만, 학계 단위의 개혁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어느 기구와 풀어야 하는지, 어떤 기구를 어떻게 움직여서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 등에 있어 한국 학술장의 국가제도 이해 수준은 아직 출발선에 있습니다(그리고 과학기술분야에 비하면 인문사회 계열 연구자들의 국가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듯 보입니다). 국가를 움직이고 싶다면 국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여러 국가기구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국가 또한 개혁과 발전, 자기성찰을 위해 전문적인 학술연구가 필요하며, 학계 또한 존립을 위해 국가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필요성에 비해 양자의 소통경로는 (역시 과학기술계에서 더 충실하게 구축해놓은) 일부 채널만이 존재할 뿐이며, 그 채널 또한 많은 경우 소수 인사들의 인간관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우리의 위기가 이러한 비효율을 방지하기엔 너무 심각하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국가기구와 대화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연구자 권리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구를 설득해야 하며, 국가기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쪽도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적으로 한국 학계는 위기라는 감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왜, 얼마나 위기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데, 남이 우리를 알아주리라 기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층 급격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학문후속세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간략한 의견을 더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대학원생이 어떤 문제를 겪으며,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밭의 잡초처럼 대학원을 대충 운영하면 알아서 대학원생이 쑥쑥 자라는 편한 시절은 지났습니다. 대학원 교육과정부터 졸업 후 연구활동을 성실하게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이르기까지 좋은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 어떤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가를 본격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아직 출발단계에 있는 대학원생 교육연구환경 조사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학술 관련 정책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젊은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한국 학술연구의 조건은 1980-90년대와 너무나 달라졌고, 1970-80년대 학번 연구자들이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지금 젊은 연구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석은 회의체든 자문단이든 당사자들을 계속해서 참석시키는 것입니다. 정석이 가장 쉽고 확실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30대부터 학술행정 및 정책 관련 경험을 쌓는 연구자 풀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인문사회계의 경우 중진급이 되어야 학술정책 관련 절차에 참여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작 해당 분야의 초짜라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20대 대학원생 때부터 정책 관련 경험을 쌓기 시작해서 50대쯤에는 20-30년 정도 이력이 축적된 연구자들을 육성하려는 시도가 시작될 때, 30년 후 우리 학계의 운명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대로 학문할 권리: 단지 연구자 생존용인가?

박 치 현

지방대부터 대학이 무너지면서 대학이 위기에 처해있지만,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자와 교육자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규모 조선소가 망할 때처럼 거대한 구조조정이 불보듯 뻔한데 왜 이럴까? 연구자권리 선언은 이러한 맹목적인 현재의 담론 흐름에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한다. 설령 대학이 살아도 대학에서 일하는 연구자와 교육자는 정년트랙 교수군 정도만 간신히 살아남을 것 같다.

오늘의 연구자권리선언은 연구자의 발을 땅에 딛도록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연구자들의 물질적 생존에서 출발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삶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연구자권리선언은 시간이 흐르면 한국 기초학문의 출발점이자 토대였다고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학술생태계가 진화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식상한 말이지만, K인문학이든 문화강국이든 학술강국이든, 연구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정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

이제는 꽤 시간이 흘렀지만, 2018년 11월에 통과된 (대학측도 합의했던) 새로운 강사법은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중대한 합의를 던져주었다. 한국 대학의 파행적 본질에 관하여 많은 것을 드러내주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대부분 그간 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이 어려웠다는 논리를 내세워 대량으로 강사를 해고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대하다. **대한민국 학문연구와 교육을 대학에만 맡기는 것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사들은 대부분 학문후속세대 연구자인데 향후 ‘연구’의 질이 하락할 것이며, 강의 교과목을 축소하여 지금보다 많은 인원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거나 전임교수의 담당강의가 더 늘 경우 ‘교육’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대학/대학원에서 문화강국의 토대가 되는 ‘기초학문’이 발전할 여지는 더욱더 사라질 것이다.

교육부가 2019년 4월 5일 발표한 <인문사회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이런 면에서 꽤려다임 전환적 의미가 있다(비록 후속 조치들은 용두사미처럼 보이지만). 강사법에서 드러난 **학문후속세대의 위기를 ‘학문의 위기’로 보고, 대학 외부에서의 연구 가능성을 부족하나마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이 아니라 ‘**학술생태계**’란 단어를 쓴 것이다. 보고서는 인문사회분야의 연구비가 처참하게도 정부 R&D예산의 1.5%에 불과(영국은 9%이상, 미국은 7%이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은 오직 ‘대학만’ 학문과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존의 대학을 고치는 것이었다. 비정규교수 해결논리도 교수자리를 늘려 모두 전임교수를 만

들고자(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방향이었다. 연구재단은 대학과 대학에 속한 전임교수(소위 연구‘책임’자)를 경유하여 연구비를 지급했다. 대학에 강사로라도 소속되지 않거나 책임연구자로 공동연구의 장을 찾지 못하면 연구비 신청도 하기 어려웠는데, 2020년경부터 연구재단사업 신청절차에서는 해결되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 시점에서 이제 과거 모델의 교수로 가는 “사다리는 치워졌다.” 대학 전임교수만 학문담지자로 보고 전임교수에게 모든 연구자원을 몰아주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더 이상 학문 수월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비효율적이다.¹⁹⁾ 국공립대 네트워크 방안이나 국공립대의 기초학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학문 후속세대는 대가 끊길 것이다. 사립대학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 않으며, 오히려 지방대 위기를 구조조정의 호기로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

현재 고등교육을 둘러싼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초학문과 인문사회분야 연구비가 턱없이 적다는 점, 인문사회 기초학문 박사 및 학문후속세대들이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사회적 삶과 연구 기능을 상당히 상실하고 있다는 점(따라서 국내 대학원의 후속세대 재생산 기능이 쇠퇴한다는 점), 연구자들의 처우가 나빠지면서 기초학문 탐구의 ‘수월성’도 몰락하고 실용학문만 득세한다는 점이다. 더 이상 대학이 연구와 교육의 터전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 중심 패러다임을 넘어서 연구자의 고용과 학문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어떠한 밑그림을 그려야 할지 검토하고자 한다.

1. one track : 처우개선을 통한 ‘연구안전망’ 구축

먼저, 비정규 교수/박사/대학원생들의 연구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박사와 강사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말한다. 이는 IMF구조조정 당시 국내에서 시행했던 ‘사회안전망’ 구축작업에 착안한 것이다. 최근에 비정규 연구자들에게는 IMF나 다름없다. 지난 5년간 5만명이었던 인문사회 강사가 3만명으로 줄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1) 2018년 통과된 ‘**새 강사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후속조치를 통해 정리해고를 막아야 한다. 2022년 1학기가 지나면 재임용기간인 3년 시점이 다가온다.

2) 학문후속세대를 중심으로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연구를 보장하는 ‘**국가박사제**’를 실시하고 인원은 5,000명 정도에서 시작하여 현재 인문사회계 시간강사 수 3만 명의 절반인 1만5천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²⁰⁾ 국가박사제를 실시할 때는 그동안 차별적 대우를 받았던 ‘국내박사’에 대한 한시적인 쿼터제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대학들의 대학원도 정상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원은 외국(특히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한 경유지(피더스쿨)에 불과했다. 이는 자생적 학문이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다.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이 안정감과 목표의식을 갖고 공부할 수 있으려면 국내 대학원을 졸업해도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해야

19) 엄밀히 말해서 전임교수 중 30%가량은 계약직 비정년트랙 교수들이다. 통계에 따르면 후속세대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비율이 훨씬 높다. 교육부와 국회와 대학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비정년트랙은 연구업적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는데 급여는 절반 이하이기 때문이다(이들은 떠나기 위해서 연구업적을 늘린다!) 특히 최근 교수노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강의교수들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본인도 최근 연구재단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으나 간접비 인센티브(간접비의 약 20%)에서 비정년 전임교수가 제외된다는 규정을 확인하였다.

20) ‘연구안전망’은 연구자가 언론지면을 통해 제시한 개념이다. 박치현, ‘[왜냐면] 학문후속세대 강사에게 연구안전망’, <한겨레신문>, 2018.12.4.

한다. 학위 후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대학원 정원을 서서히 줄여야 한다. 또한 국가박사들의 대학강의시수에 제한(6학점 이하?)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직 박사학위 전인 대학원생들이 강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국가박사의 인원수와 선발기준, 연구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가칭 ‘국가학술위원회’가 만일 구성된다면 거기에서 결정한다. 국가박사 예산은 현재 한국연구재단 예산(인문사회A가 모태가 될 수 있다)으로도 시작은 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에서 해고되거나 국가박사를 하지 못한 강사들에게는 (대학이 아닌) 지자체와 결합하여 인문학 대중화 사업과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평생고등교육사업**’을 실시한다. 대학에서 보통 들을 수 있는 인문사회, 기초자연과학 등의 과목을 강사가 직접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개설권**을 중시해야 한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박사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논리가 있다.²¹⁾ 자기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왜 지원해 주냐라는 비판이다. 기초학문을 지원하는 것이 구제 사업인가? 지금처럼 대학 내의 일부 교수들에게 몰아주는 것이 과연 학문적 수월성에 효율적인가? 차세대에게서 새로운 학문적 역량이 구현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수월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후속세대의 연구지속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한, 소수에게 몰아주는 것조차 후속세대에게서는 불가능해진다. 이제 우수한 학부생들이 기초학문을 선택하지 않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기 때문이다.²²⁾ 이런 **反수월성**이 어디 있는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통문화를 보존하듯이 **기초학문에 대한 국가 책임성 원칙**을 여전히 확고히 지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국가 책임 문제는 대학에 일임하기보다는 투 트랙으로, 국가박사제 시행 및 기초(기본?) 인문사회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대학을 살리려다, 학문이 죽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two track : 기초 인문사회학문의 수월성을 위한 국가책임 연구기관

다음으로 학문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콜레주 드 프랑스 모델**을 검토하여 수용하며, 사회과학은 **국립 기초사회과학 연구원**을 설치하고, 인문학은 현재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확대하거나 기초사회과학 연구원을 기초 인문사회과학 연구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²³⁾

1) **콜레주 드 프랑스**는 철저히 기초 학문만을 연구하며, 학비(수강비)가 ‘무료’이면서도 입학에 위한 등록도 없다. 학위도 주지 않는다. 무학비, 무입학, 무학위. 그런데 노벨상은 10명 이상 배출했다고 한다. 콜레주 드 프랑스는 미셀 푸코나 피에르 부르디외 등 세계적인 학자들을 배출했으며, 프랑스를 인문사회과학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곳의 교수가 되는 것은 대단한 영예

21)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하이브레인넷도 동일한 견해를 보인다.

22) 석박사 취득자는 2010년도까지는 뚜렷하게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대학원 입학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 청년층의 석박사 이수율은 3%로 OECD회원국 및 조사대상 44개국 가운데 33위이며, OECD 평균 15%보다 12%나 낮다. **석박사가 많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다. 석박사들이 수요에 비해 많아서 취직이 안 된다는 세간의 상식은 문제가 많다. 오히려 강제적 수요축소가 현실에 부합하는 설명 아닐까? 기초학문의 관점에서 보면 연구할 것은 많은데 연구자가 없다!<10만 명의 석박사들 어디로 가오리까>, <<경향신문>>, 2012.3.14

23) 자연과학 분야는 이명박 정부 시기 ‘기초과학연구원’이 설립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연구자 750명에 연간 3,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인문사회의 경우 1,000억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로 여겨진다. 철저히 국가(왕실)지원으로 운영된다. 한국은 그동안 인문학을 대중화하다 못해 지나치게 통조림화된 인문학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런데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들은 자신이 연구한 결과와 연구 계획을 학술지도 연구재단도 심사위원도 아닌, 불특정 다수의 ‘시민대중’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이는 엘리트주의와 민주주의를 절묘하게 결합한 제도로 보인다. 학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듣고 싶은 또는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들으러 오고, 교수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되 쉽게 강의하느라 애를 먹을 필요도 없다. 즉 인문학의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시민들이 인문학을 통해 ‘상향화’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대중에게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지식의 민주주의’라는 지향에도 부합한다. 시민들에게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국가가 학문의 내용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소지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수를 쫓을 일도 별로 없다. 시민청중들이 들으러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국립 기초사회과학 연구원**(이하 기사연)은 한국사회의 문제들과 미래 방향성을 근본에서부터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이며 프랑스의 CNRS나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을 참조하여 한국적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국가박사들의 연구공간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BK사업 등처럼 대학이 고용주이자 연구공간 제공자이고 정부가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존의 ‘불안정’ 체제를 탈피하고, 국가가 고용주로서 연구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분간 학위과정은 두지 않고 정책파트도 두지 않는다. 특히 R&D개념이 아니라 ‘학술’ 연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R&D는 단기 성과물을 내야하는데, 사실 기초학문은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린다. 따라서 기사연에는 매년 일정 예산(500억이면 최대 1000명 고용가능)을 투입하되,²⁴⁾ 연구주제는 매년 대주제만 국가학술위원회(?)로부터 부여받고 대부분은 기관 자체에서 bottom-up 방식으로 한국사회에 필요한 연구주제를 정하고 연구한다. 장기주제든 단기주제든, 개인연구든 융합연구든 자율적으로 연구를 생산한다. 학문후속세대 위주로 연구원을 선발하면 고용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국가박사제가 시행된다면, 학문분과별 균형을 고려하여 국가박사들이 여기서 근무할 수 있게 한다(급여는 국가박사+a 더 지급). 물론 부분적으로는 외부 연구를 받더라도, 기본틀은 시장 논리의 무풍(無風)지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24) 만일 5천명에게 연구원 근무자(1,000명) 4천만원[대학출강제한/6학점]/비근무자(4,000명) 2천만원을 지원할 경우, 총액 1,600억에 불과(현재 연구재단 인문사회 예산의 절반 정도). 2020년 전국 대학 연구소 전임연구원수 4,466명이며, 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회과학분야 지원자수(선정자가 아니다) 약 1,000명이다. 인문분야도 약 1,000명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인문사회분야 비정규연구자는 6,500명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엔 강사를 겸업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여성연구자의 생애주기와 연구환경

김 어 진 · 정 보 라

1. 연구공간의 문제

- 비정규직 연구자들은 소속된 기관에서 연구공간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구자 사이의 가장 큰 차별입니다. 비정규직 연구자들은 집이나 도서관, 차 안, 공공도서관이나 커피숍 등 “알아서” 연구공간을 찾아내어 연구활동을 해야 하고 연구자료를 계속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물리적으로 안정된 연구공간 확보가 연구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연구할 곳을 찾아서 연구자료를 싸 들고 돌아다니면서 시간 및 정신적 자원 소모가 장기간 이어지고 운이 닿는 대로 앉을 자리가 날 때만 산발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경우 연구실적의 감소로 이어지며 불안정한 비정규직 연구자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 인문계 연구자들의 경우 도서관 장서와 학술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유료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구독해주지 않거나 교직원증 발급을 해 주지 않아 도서관에 접근할 수 없을 경우 연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강의 기간이 아닌 경우(방학중)에는 도서 대출 자격도 박탈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필요한 외국 문헌을 자비로 구입하거나 알음알음 빌려서 문헌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공계 연구자의 경우 연구장비와 안전한 연구환경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예체능계 연구자의 경우 연습실 혹은 연습공간, 악기와 적절한 음향장비, 창작활동이나 체육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재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연구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야도 많습니다.

- 연구공간 자체의 확보와 함께 안전한 연구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금 연구공간의 소독과 방역,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거리두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강사실에 책상이나 컴퓨터가 모자랄 경우, 강사실이 너무 좁을 경우 안전한 연구와 수업 준비가 불가능해집니다.

- 강사의 경우 학교에서 공동연구실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으며 그 중간 형태로 노조 혹은 “강사협의회” 등에 가입해야만 노조/강사협의회에서 공동연구실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강사에게 학교가 연구공간을 제공할 의무를 버린 행태이며 노조 가입한 강사와 그렇지 않은 강사끼리 대립하게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 특히 판데믹 이후로 학교 출입이 통제되자 강사실이 폐쇄되거나 강사에게 고지 없이 출입증 등의 제도를 실시하여 강사실이 있음에도 강사가 출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강사실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지자 강사실에 직원들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식사나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며 오히려 강사실을 사용하려는 강사들에게 눈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는 판데믹 이전부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비정규직 연구자의 연구공간 확보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보여줍니다.

2. 연구 강의를 위한 각종 여건(장비 비품 등)

- 강사실 비품과 소모품을 학교에서 공급해 주지 않아서 같은 강사실을 사용하는 강사들끼리 돈을 모아서 사거나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거북할 정도입니다.
- 비품과 소모품 등 사소한 보이는 문제가 연구환경을 지속적으로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판데믹 상황에서 손소독제 등의 소모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없습니다.

3. 여성 비정규직 연구자들에게 연구노동의 지속성이 가지는 의미

-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연구분야에서도 여성 연구자는 가정생활과 연구활동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일이 많습니다. 순수학문 분야일수록 안정적인 연구활동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양립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인 관련 활동들을 전부 포기해야 그나마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연구 강의를 이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 학기 15주 강의 기간 내에 출산 기한이 겹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강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유급 출산 휴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지라 출산은 전임 트랙으로 옮겨갔을 때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으로 한 학기 강의를 빠지 못하거나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구자로서의 생애가 끝날지 모른다는 압박감이 업습해 온다’식의 토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젊은 연구자의 경우 중 더 많은 경우는 결혼을 아예 아주 먼 미래의 일이나 가능하지 않을 일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어렵사리 했다 하더라도 육아라는 더 큰 산이 여성 연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종일반이라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더욱 열악해진다.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었던 코로나 상황에서 여성 연구자들은 육아, 가사의 더 큰 부담을 져야 했다.

- 무엇보다 여성 연구자들이 받는 임금은 비혼 미혼이더라도 매우 적지만 결혼을 했다면, 아이가 있다면 관련 비용은 여성 연구자들이 받는 현재 임금 수준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4. 연구지속성과 안정성의 문제

- 비정규직 연구자들에게 강의를 준다는 결정은 결국 정규직 교수들이 내리므로 정규직 교수가 강사에게 학술단체 운영 혹은 학과 내의 여러 잡무를 맡길 경우 강사는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니다. 강사가 강의가 아닌 연구활동과 간접적으로만 관련이 있거나 아예 관련이 없는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될 때 제대로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문학 관련 학술단체 간사 업무 보상은 없거나 월 20-30만원 수준입니다.)

- 학술단체 내에서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연구자들 사이의 불평등이 더욱 부각되는 일이 많습니다. 학술단체 실무담당자가 비정규직인 경우 회계나 경비처리, 학술단체 명의로 진행되는 사업 등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이 실제 업무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전부 떠맡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부당한 업무이지만 맡기는 사람들이 계속 같은 분야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거절하면 일자리가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따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강의와 함께 기본적인 연구활동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학술단체나 학과의 잡무까지 떠맡게 되면 당장 다음 학기의 일자리를 위해 연구는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 비정규직 연구자가 매일같이 물리적으로 느끼는 연구환경에서의 불평등과 제약들 속에서 항상 감내를 강요받는 구조는 이런 것입니다. ‘정규직이 되면 모두 해결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비정규직 연구자들은 연구실적 쌓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상당한 연구업적을 생산해 내야 하는 압박에 스스로를 몰아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 교수 그 누구의 기분도 거스르지 않는 무난하고 조용한 삶을 살며 기회가 오기를 준비하라는 주문을 실제 여러 교수들로부터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대학은 물론 한국사회 모든 분야에서 신분제, 계급제로 기능하며 더욱 배제적이고 차별을 공고히 하는 체계로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속임수이고 거짓말입니다. 노력해서 교수가 되라는 그만하고 비정규직 연구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일에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정책적, 제도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연구생태계는 이미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취약한 환경에 놓인 연구자들에게 그저 노력하고 연구실적을 더 쌓으라는 주문만 되풀이하는 것은 학문후속세대가 연구를 그만두고 연구자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대학으로의 전면적 개편이 절실합니다.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여성 연구자의 생애주기가 단절적으로 불연속적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될 것이다.

첨부자료1. 연구자 권리선언문

연구자 권리 선언

연구자 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문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유 의지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연구, 교육을 수행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는 연구자들에게 활동의 기본 토대가 된다. 우리는 현재 이 토대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연구의 공공성은 매우 취약하며, 환경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미증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데 절실한 성찰적이고 창발적인 연구는 단기적 성과주의가 지배하는 경쟁 체제에 의해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삶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하는 것이 마치 정언명령처럼 통용되면서 진리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조차 사실상 기업으로 전락하였다. 무엇보다 대학 붕괴가 현실화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연구자로서의 삶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공포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 연구의 공공성 위기와 연구자의 생존 위기는 단순히 연구자라는 특정 직종의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편적이고 공공적 가치에 기반한 연구 활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금의 상황에 절망하여 침묵하고 있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절실하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교육과 연구에서 공공성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한다. 이것은 단지 그간 학문 활동의 터전이었던 대학의 공동체성을 보듬어내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확대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를 정당하고 당당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로서의 권리를 선언하고 사회적 책무를 밝힌다.

제1조 연구자의 정의

연구자는 연구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체계적 지식을 연마하고 전수하며, 합리적 방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일체의 행위를 연구 노동이라 한다. 호기심을 품은 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연구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연구자는 인류 공공의 지적 체계를 갱신함으로써 공동체의 진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책무

제1항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을 윤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연구자는 서로를 학문 공동체의 동료로서 존중하여야 한다.

제3항 연구자는 인류 사회와 생태 환경을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평등

제1항 모든 연구자는 각자가 속한 학문 공동체에서 동등한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항 모든 연구자는 젠더, 섹슈얼리티, 지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지역, 학교, 신체조건, 혼인,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연구 성과

연구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공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 성과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연구 성과가 왜곡·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연구 환경

연구 환경은 연구를 수행하는 물리적 공간과 학문 공동체의 문화와 제도를 포괄하는 공공영역이다. 연구자는 연구의 지속과 연구 역량의 증진을 위해 연구 환경의 안전성·안정성·개방성·독립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항 (안전성) 연구자는 연구 수행상의 각종 사고와 성적·정신적·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연구 환경을 보장받고,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안정성) 연구자는 연구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과 고용 안정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항 (개방성) 연구자는 연구 생산물, 자료, 기관 및 공동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지 않고,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환경 속에 고립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4항 (독립성) 연구자는 연구 활동 및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해 타인에게 침탈 받지 않는 시공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정책 참여

연구자는 연구 및 교육과 관련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조직 결성

연구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연구, 교육, 노동 관련 조직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사회 경제적 권리

연구자는 모든 노동자, 시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구노동을 통하여 노동자로서의 생존, 시민으로서의 품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체 사회를 대표하여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학문의 독립성, 자생성, 지속성을 뒷받침하고 연구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항 국가는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연구 공간, 자료 접근성, 강의와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2항 국가는 연구자들이 생산한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확대할 의무를 지닌다.

제3항 국가는 학문 공동체에 대한 연구자의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피선거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4항 국가는 연구자가 학문 및 교육 분야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닌다.

제5항 국가는 연구자 관련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닌다.

제6항 국가는 연구자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닌다. 여기에는 여러 사회 보험과 연구자 생애 주기에 맞는 재정 지원 등의 제공, 재생산 권리 보장, 연구자를 위한 사회 주택의 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